

第29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2010年6月16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경제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 1
- 1. 경제에 관한 질문 ..... 4

(10시0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의장 박희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힘을 보여 주셨습니다. 독선과 독단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를 단호히 심판하셨습니다.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고 전쟁 위기까지 불사하는 정부 여당의 문제를 준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숨 좀 쉬고 살자는 여러분의 간절한 말씀 덕분에 야당이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 야권연대의 힘을 키워 교육과 복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투표 한번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MB악법 강행, 부자 감세, 4

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강행, 언론 장악, 노동탄압으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분노가 분출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인적 쇄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출발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쟁 위기를 불사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즉시 이행하십시오. 서해를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만들고 전쟁 위기를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을 짓밟을 때 종교인들은 그 생명들 앞에 엎드려 대통령의 잘못을 대신 참회하고 있습니다. 문수스님께서 자신을 불살라 소신공양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십시오. 민생을 논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혼란의 뒤처리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파견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18대 전반기 국회는 MB악법 직권상정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가 남은 후반기마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계속해서 안 됩니다.

이번 6월 국회부터 민생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부터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첫째, 4월 국회에서 지경위에서 원만히 합의되고도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가장 먼저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SSM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만 결심하면 됩니다.

둘째, 무상급식법도 이번 회기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눈치밥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보편적 복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합시다.

셋째, 6월 30일은 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개정 시한입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집회를 전부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현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법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음규제와 질서유지선조항이 있으므로 평화적 집회로 유도하는 데 현행 집시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회로 거듭납시다.

넷째, 스폰서 검사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검사 자신에 대한 수사과 기소의 권한을 절대 외부에 내놓을 수 없다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

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우리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범죄 사실을 안다고 보이는 사람의 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할 수 있게 하고 신원진술을 요구하는 심대한 인권 침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인권 침해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회의 인권 지수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자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면적 재논의에 부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협 개혁, 거꾸로 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부문을 지주 회사화하여 거대 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사업 전체를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반협동조합 방식의 개혁 방안입니다.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는 민주노동당의 농협법 개정안이 개혁의 대안입니다.

18대 전반기 국회는 MB악법 직권상정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가 남은 후반기마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계속해서 안 됩니다.

이번 6월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숨기느라 급급했고 말 바꾸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을 북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보고 유엔안보리에 상정했습니다. 마땅히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니 국민들부터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도리어 의문을 말하는 연구자를 고소하고, 안보리에 의견서를 보낸 시민단체에게 어느 나라 국민이나

고 따져 물으면서 이적행위자로 몰아잡니다.

국민 탓 그만하십시오. 남북관계가 대결로 가서는 안 되니 차분히 진실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자는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지방선거를 천안함 선거로 만들려다가 역풍을 받은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 그만두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수긍하지 않고 국민에게 고소를 일삼는 국방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고 자유로이 토론할 공개 검증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는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를 짓누른 냉전과 대결을 무너뜨린 역사의 분기점, 전 세계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나 10주년의 아침 남북은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고 조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서 북의 소행으로 단정해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아무리 사소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사,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한 국제적 검증을 통해서 관련국의 대화와 해결의 노력을 모아 갑시다. 6·15 공동선언 이행만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연기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환수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군사주권을 되찾는 것마저 미루자는 정부와 여당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갈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애국을 논할 체면이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하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적대정책으로 후퇴했습니다. 천안함 북풍 선거의 칼바람을 뚫은 국민의 힘이 다시 "Oh, Peace Korea"의 함성으로 울릴 때 미

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미국도 북과 중국을 긴장시키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다시 대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격을 높이자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에는 국격 태스크포스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검증받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 성장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두 번째 방문한 나라는 이란과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보고관조차 국가정보원이 미행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이 말하기 두렵고 언론이 보도에 주저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감시당하는 사회로 계속 만들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공존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계는 형평성과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징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당비와 후원회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에서 일어나는 징계 의결 요구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결도 있기 전에 기소된 전원을 파면,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7월 1일이면 직무를 시작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들이 그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서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은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까지 한 당원인 교사들 수사도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2만 원을 후원했다는 교사는 기소되고 파면까지 위협에 처하는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에 수백만 원을 후원한 교사들은 정치 검찰 비호 아래 무혐의 처리되는 나라,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격 높은 나라의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당하거나 정치적 기본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할 사건을 빌미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비열한 행동을 검찰은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표경기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질임금 1%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도 2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1개국 중 17위입니다. ILO 기준으로 하면 59개국 중 48위입니다. 2009년에는 물가상승률만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당 5180원으로 올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지난 5월 고용지표는 호전됐지만 유독 청년층 고용이 저조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의무고용제 등을 도입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시대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 가서야 재정적자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중에는 나라 빚을 늘이는 것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사회적 책임과 기여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인세 감세분만큼의 고용지원세를 신설해서 고용 창출의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6월 13일 공식적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완화정책을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습

니다.

그러나 외화차입 수량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외화조달시장 거래량의 50%를 차지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250% 제한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국내은행은 규제한도를 50%로 오히려 완화했습니다.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위기는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통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변예치의무제, 토빈세, 위기 시 유출자본의 유예기간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구청장으로 만들어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노동당은 집권의 청사진을 내보이겠습니다.

지방공동정부를 야권연대의 모범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적 요구인 반MB 연대를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더욱 넓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더욱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고 여러분 가슴 속으로 소박하고 따뜻하게 스며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심장은 국민 여러분과 같은 맥박으로 뛰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태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24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그리고 정회 후 오후에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도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상실감은 '88만 원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을 넘어서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면서 국운융성의 때가 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의 말에 국민들은 상당히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담겨 있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률과 같은 수치, 알아듣기도 어려운 고담준론이 아니라 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 속에 천착하여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속으로, 현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서민경제의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러한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현장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역의 순댓국이나 미용실, 목욕탕 같은 이렇게 서민들이 모이는 거리에 가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느냐?' 하고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생방송 연설 중에 "금년 하반기쯤이면 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리께서는 어떤 근거와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지……

○국무총리 정운찬 최근의 통계를 보면 1/4분기

성장률이 8.1%가 되고 또 금년 들어서 고용이 한 6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하반기쯤이면 서민·중산층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층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써는 어떤 근거와 판단이라기보다는 보통 때 그냥 얘기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금 8.1% 성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고용의 60만 증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경제의 한 부분에 개선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종구 의원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잡히는 그러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좀 이렇게 국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설명을 정부가 좀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경제정책이 너무 기능론적으로 그동안에 흐른 것이 아닌가, 좀 구조론적인 또 그리고 미시경제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현장에서 생활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세심한 대책을, 정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무래도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재정적으로 선제적 지출 정책도 썼고 또 금융적으로는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시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미시적 정책을 다루기에는 좀 여유가 없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금융 위기를 극복한 것이 정부가 고환율 정책같이 ‘수출 우선’ 그리고 ‘대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총리께서는 현재의 경제정책이 아직도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했던 것같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출 대기업 그다음에 내수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수출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생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수출 기업을 위해서나 또는 대기업을 위해서나 쓰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준다든지 또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수출 기업 중심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구 의원**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 보면 대기업들이 협력 업체나 하청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는 그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가 고민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안 하…… 뭘 보고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경기가 나쁠 때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중소 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자율적인 상생협력 관행을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것을 위해서 하도급 거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감시하는 한편 공정위원회라든지 지경부가 유관 부처 공조를 통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등 정부의 중재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제가 선거 도중에 국민들이 질문하신 것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또 회사자금 횡령 혐의 이러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된 그룹 총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누락된 세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기억합니다.

**○이종구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그룹 총수들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그러한 약속을 한 기업들은 비록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굴지의 기업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 결과 기업 활동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약속을 앞으로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룹 총수들이 불법을 자인한 그러한 재산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국회에 한번 내 주세요, 좀 알아보시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좀 더 미시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1만 원 가지는 정말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 5만 원으로 장바구니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서민들이 물가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소비자물가는 2%대다. 별문제가 없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농산물 또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6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입물가도 상당히

급등해 가지고 소비자물가를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생활물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안정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물가는 2%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상승이, 어떤 제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공급을 늘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사실은 가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동시에 역시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종구 의원** ‘물가가 한국은행의 몫’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정부도 물가를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하는,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이 있어요, 국이.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경제정책에 금융정책으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쪽 실물 부분에서는 역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격변수보다는 역시 물량 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당히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구 의원**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가격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급과 관련한 대책 같은 것도, 대응책도 신속히 마련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실업 문제는 총리께서도 대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내 놔야 돼

요. 물론 이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신다고는 들었는데요,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까만 경제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또는 특단적 대책이 없듯이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청년들 특히 대부분이 요새는 청년들이 고학력입니다만 고학력자의 청년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은 과잉되는 데 반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또 정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또 청년구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회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반드시 어떤 기업에 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만, 미스매치 해소 대책도 가지고 있고 또 창업 지원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예를 들어서 규제를 역시 완화한다든지 또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또 이른바 투자 마인드 또는 케인스가 얘기하는 야성적 충동을 자극한다든지 하는 일도 하고 좀더 장기적으로는 역시 한국경제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런데 이제 현장의 실상을 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 같은 문제도 미분양 그 자체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미

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어진 건설기능공이라든지 미장공이라든지 도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용전략회의라는 걸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종구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업 부문별로 고용에 대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는 지금 거시적인 고려와 또 거시 정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이것을 쪼개서 본다는 의미에서의 미시적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MB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큰 어젠다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의 어떤 신성장동력으로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오랜 회임 기간이 필요하죠. 친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관련 분야의 기술도 축적이 돼서 결실을 맺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들은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바로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무슨 파이가 커지는 줄 이렇게 환상 같은 거를 느끼게끔 정부가 그렇게 해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저탄소녹색성장이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녹색성장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지금 기초를 닦아놓고 나서 녹색성장정책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먼저 녹색성장의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맘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 그 시행령을 제정하고 5개년계획 수립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기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녹색성장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은 세계적인 녹색성장 조류 속에서 녹색성장 무드 또 녹색성장 산업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저탄소녹색성장이 우리 경제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 뭐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이종구 의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잘.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한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른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녹색성장국가전략 그리고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약 2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전체적으로 한 백이삼십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큰 원인이 일부 유럽국가, 소위 피그스(PIGS)라는 국가들의 국가채무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GN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얘기하면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도 이제는 잘 아세요. 경제 위기의 최종적 보루로서 어떤 재정의 역할, 재정이 중요하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채무 규모가 60조에서 무려 407조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이후에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 위기라는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규모 또 속도가



이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을 정부가 상당히 깊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채무가 일정한 수준을 넘은 이후에는 빛이 빚을 부르는 이러한 악순환이 전개되고 그러한 탓에 정부가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리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건전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상한을 설정한다든지, ‘페이코(Paygo)’라는 용어 아시지요?

우리가 법률을 낼 때 예산을 증액하는 법률을 내면 동시에 그만큼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같이 낼 때만이 그 법이 성립돼서 한다하는 그러한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가 폭을 확실하게 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 이것을 국회에 미리미리 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갖는, 이래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정부가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우리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대체로 2013년 또는 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한 30% 중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다시 말해서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페이코 원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페이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의무지출이나 또 신규 세입감면 요구 시 기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너무 소극적인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작년에 수출이 아홉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고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도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코 원칙을 갖다가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하나의 감안할 요

소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현행처럼, 의원님이 단기하고 중기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금처럼 예산안과 함께 10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출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간 연계가 약화되어서 사실상 단년도 예산체제로 복귀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치와 예산안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획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총리의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안이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재정운용을 좀 건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건전하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페이코 정책 같은 것을 머릿속에 두되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하고 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일본이 새 정부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러한 획기적인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1년 예산부터는 좀더 공개 폭을 넓혀 가지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전문가, 민간 부문에서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좀더 폭을 확대하시도록 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편중 인사 문제에 대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정부 들어서 지역 편중인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또 공기업의 자회사 이러한 데에 일부 편중인사가 있다…… 기관장 출신지를 분석해 보니까 영남권이 40%가 넘는데 충청권은 14%, 호남권은 13%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저는 이 호남권·충청권 분들이 인사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실감, 박탈감 이러한 것이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세종시 문제와 같은 걸로 드러나는 이슈도 영향을 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인사 편중에 따르는 바닥 민심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악재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장치, 이러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제가 보기에 는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장들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편중 문제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심지어는 민간 회사까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다양해야 다양한 경험 또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부딪치는 가운데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장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사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창의성,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공정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감사원의 감사 유의항목으로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총리가 직접 이러한 지역 편중인사같은 것이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정부와 여당 모두 빠져린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민경제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 갑 출신 민주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48시간 전에 질문서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서를 안 주셔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웃음소리)

**○오제세 의원** 저는 오늘 민심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무섭다, 대단하다, 대단히 현명하고 준엄한 그런 국민임을 보여 주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나라당 지지층, 상류층에 속하신 분 말씀은 “선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가 잘 수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또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신 서민층 재래 시장 주민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안 돼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님, 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는데 솔직히 그 결과가 아직 잘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는 겉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긴 하지만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겉히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나라당 지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선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여 쪽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안 믿겨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라 선거 당일부터 그 선거 결과는 겉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의원 솔직히 총리님, 그 개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상 밖의, 예상 밖의 그런 참패의 결과를 보시면서 총리님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만약에 출구조사가 없었더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출구조사, 3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구조사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그날 저녁에는 적어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제세 의원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제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오제세 의원 그러면 민심을 몰랐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민심과 역시 선거로 나타난 민심과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제세 의원 그러면 이제는 민심을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뭐 충분히 다 알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더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중산층, 이른바 서민층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들의 대화 및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제세 의원 지금 15일이 지나고, 대정부질문 3일째를 하고 있는데 총리님의 답변 말씀과 또 지난 월요일의 대통령연설을 보면 ‘지금 민심을 알고 계시지 않다. 모르고 계시다. 그리고 민심과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심은 ‘일방독주 식의 밀어붙이기 국정 기조는 하지 말아라. 바꿔라.’ 그리고 경제 친서민·중산층 실용 정책을 하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로만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아니라 실제 한나라당은 2년 반 동안 친부자·대기업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친서민·중산층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민심인데 지금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대장은 그대로 하겠다.’ 총리께서는 ‘세종시는 수정이 맞다’ 그리고 ‘인적 개편은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하시겠다.’ 그리고 ‘서민경제 경제기조는 그대로 하고 나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오늘 아침에 국민은행 지주 회장을 어윤대 씨로 내정했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은행 지주회장은 지난번에 그 은행에서 전문가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분을 낙마시키고 이번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 지난번에 모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검증 때문에 취소하고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친인사로 이번에 국민은행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없구나, 아까 ‘몰랐던 민심을 알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

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다시 의원님께서 저보고 민심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지역의 민심도 알고 또 전체, 전국의 민심도 이번에 많이 읽었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의원 총리님,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정몽준 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하고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거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당 대표와 총리·비서실장, 나머지 두 분은 누구입니까?

총리와 대통령께서도……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무엇이 잘못됐지 았았느냐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답답하다’ ‘기가 막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문 여론조사에서 ‘국정 기조를 안 바꿀 것이다’ 하는 여론조사가 66%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벌써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어제 석간신문 사설에서, 모 신문에서 ‘청와대는 민심과 다른 길로 가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 칼럼에서 ‘대통령 위기, 어차피 힘든 거 그냥 내 방식대로’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바꾸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그 자세를 유지하겠구나 하는 것을 벌써 꿰뚫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방선거에 패배했다고 치더라도 저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이 우리 정부를

보고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 표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또 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할 필요는 있고, 따라서 일을 할 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침’, 다시 말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보고 지금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의원 총리님께서, 제가 언제 친서민·중도 정책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고……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이……

○오제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오제세 의원 아니, 글썽 기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은 안 하시고 친대기업·친부자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계시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이번 선거가 지방정부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아마 대단히 국민을 모독한다, 국민은 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이 정부의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대표가 사표를 낼 정도라고 투표를 했는데 ‘아, 도지사 뽑는데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총리가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께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은 친서민·중산층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은 서로 친서민·중산층 정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실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친부자·대기업 위주의 현재의 시장 만능의 경제 정책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아니다, 진정한 중도실용 정책을 하도록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총리께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안 바꾸겠다,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몇 말씀만 드

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이제는 대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자꾸 이 정부는 대기업 정책을 쓴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쓸 툴(tool)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관계도 있고 또 아직도 자생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백방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른바 감세정책이라고 그래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은 다 철회했습니다. 이제는 감세정책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투표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 갖고 자꾸 국책사업에 대해서 견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지사에 당선된 김문수 지사는 세종시에 대해서 수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선됐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 하겠다고 하면서도 전남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오제세 의원** 자꾸 총리께서 지방선거가 지사를 뽑는 선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은 정치를 안 해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지고 대통령선거에서 졌어요. 지방선거는 그 정권의 중간 평가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중에서 2년 반에 대한 치적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전반전에서 지금 참패한 겁니다. 이제 후반전 남았어요. 그런데 전반전과 똑같은 전략·전술을 하면 후반전에서도 참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2년 남은 총선과 2년 반 남은 대선에서 심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옛그제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면서 ‘대한민국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선진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선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잘 하고 있는데 정치와 정부가 국민을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부 보고와 여론조사가 국민의 바닥 민심을 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거시지표와 정부의 보고와 언론의 보도가 실물경제·바닥경제를 모르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정치 민심을 정부가 모르듯이 실물경제·서민경제·바닥경제를 정부가 모르고 있느냐, 똑같은 모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물경제·바닥경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100조 원의 빚을 늘리고 서민은 150조 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이 이와 같이 부채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었다, 이 부채로 지탱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아파트 거래가 67%가 동결되고 있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 730조인데 정부가 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1년 6개월째 지금 2%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담을 뒤로 엄청난 미루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부채와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가 대단히 안 좋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모르고 계시다 또 총리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채로 우리 경제를 지탱했다는 말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98년, 99년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 의원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가정하셨을 경우에 선제적 재정지출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LTV나 DTI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 조심하라고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은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풀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의원**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시장주의 정책, 성장 정책, 감세와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감세나 이런 시장주의보다는 복지를 늘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 많은 대통령 참모들께서 유럽의 복지병을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복지보다는 성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병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유럽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이 겪었던 복지로 인한 경제 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지나친, 과도한 복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도한 복지가 결과적으로, 중국적으로 근로자 개인한테도 근로 의욕을 오히려 상실하게 하고 또 지나친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 사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북구라과도 지금 국민부담률 기준으로 하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자기 소득의 40%, 50%를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복지

비용은 결국 성장을 통해서 아니면 조달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조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자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자는 뜻이니까요. 중국으로서는 결국은 경제를 성장하자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베푸자는 것이니까요. 중국적인 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전이나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단계가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국 지금 구라과 복지의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 per capita GDP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금년에 한 2만 불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북구라과 같은 데는 많은 데는 3만 불, 5만 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갈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북구라과 같은 나라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상당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라마다 그런 세출구조가 다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성장과 복지를 다른 축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적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제세 의원** 우리나라가 서구라과의 복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모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적인 발전 단계라든지 국민 소득 수준이 다른데 ‘복지 수준만 다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나라는 국방비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국방비는? 그렇게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단적으로 노령연금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도입된 지 이제 2~3년밖에 안 됐고, 그렇지요?

한 300만 명에 대해서 8만 원, 9만 원 정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럽의 수준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도 그렇습니다. 노령 복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복지수준은 지금 현

재 우리가 재정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도 복지 예산이 부문별 중에서 27%에 이를 정도로 제일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결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지출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제세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 민주당에서 친서민·실용정책을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봐 주시고요.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밖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 선거 결과도 인정을 하시고 또 사실은 친서민 정책을 정말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지명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보고 ‘정 교수도 서민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서민 출신입니다.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함께 일 합시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민 출신들은 서민의 마음을 압니다. 겉으로 서민에 대한 제스처는 사실 오히려 부족할지 모릅니다, 서민이 서민에 하는 제스처는. 그러나 오히려 부자들은 서민에 대한 제스처는 잘 할지 모르지만 서민의 마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일에 매진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적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국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을 더 하십시오.’ 이걸 사실 앞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성영 의원입니다.

회의 초두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의 6·15 선언이 역사의 정방향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15 선언을 망친 장본인이 누구니까?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기 꼭 1년 전인 99년 6월 15일에 1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하고 주적 개념을 묻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없었습니까? 2002년 당시 월드컵 준결승전 날 2차 연평해전을 도발해서 우리 고속정이 침몰하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수장됐습니다. 2006년에는 핵 개발과 핵폭탄으로 또 도발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의 1년이 딱 되는 2007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겁니다. 임기가 고작 몇 달도 남지 않은 겁니다.

6·15 선언을 누가 휴지로 만든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연평해전의 도발이 있었고 핵 실험이 있었고 핵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15 선언을 폐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세력이 또 남한에 있습니다. 바로 참여연대 같은 어쭙잖은 정치세력이라든지 또 일부 정치세력이 김정일의 편을 들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6·15 선언이 폐기되고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의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금융위원장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진동수 금융위원장님은 FSB 회의 참석차 출장을 갔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 사실의 대강을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검찰 발표 내용을 저희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과거 중앙언론사에도 보도가 되고 또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15일 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했고, 제가 금융위원회에 두 차례 서면질문서를 보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이런 겁니다.

2009년도 검찰이 박연차 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라웅찬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이 건네진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박연차 회장이 말이지요, 자신이 은행장, 금융지주회사 사장, 회장으로 23년 동안 근무하던 그 은행 임직원을 시켜 가지고 수십억·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그중에 50억 원이 바로 그 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금 추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주성영 의원** 제가 보낸 질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주성영 의원**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는 통보를 안 했어요. 그게 통보가 됐다면 현행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일단 검찰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감독 당국이 제공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성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저에게 답변했던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의 요체가 실려 있어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거기에 보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는 제재 대상입니다. 바로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같은 규정 18조를 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해임권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의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겠지만 바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웅찬 회장이 실명전환 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의원님, 라웅찬 회장이 실명제 위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 당국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요, 또 지금 현재 금융실명법에 보면 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구체적인 차명계좌의 명세나 명의인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실명제 위반에 대한 혐의의 조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영 의원** 그러면 언론에서도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권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구체적으로 실명법 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실명법 위반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사를 위해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대상 거래기간이나 해당 점포, 특정 점포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법무부장관님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속기록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정도의 상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저희들한테 제공돼야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의원** 왜 요청 안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임원의 결격 요건에 구체적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라웅찬 회장 임원 변경 신고를 우리가 접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보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에 어떤 요청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성영 의원** 총리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총리님, 제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것 다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총리님께 물으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5조의2에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부위원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보면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다음에 같은 법 67조에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께서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차명계좌의 명세, 명의인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받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서면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했어요. 그것 왜 요청 안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의원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감독기관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해당 관계 당국, 검찰 이런 당국에 우리가 어떤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주성영 의원** 아니,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요청합니까?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데예요?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금융감독원은, 이 라웅찬 회장의 경우에는 임원변경보고서 확인을 통한 결격요건 심사과정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허위의 서류를 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판단 자료는 바

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라든지 언론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의원님, 그 임원 변경신고 시에 라웅찬 회장 본인의 자필 서명이라든지 범죄 관련 수사기록 이런 증빙을 다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증빙을 받을 당시에는 실명제 위반 사항은 관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수리하지 않을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성영 의원** 본인이 그런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안 했다 이게 주제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법에는 소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봤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자격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구체적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성영 의원**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잠깐 아까 들어갔다 왔습니다.

○**주성영 의원** 예, 나중에 보고받는 것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거예요. 라웅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기가 20년 이상을 지배하는 신한은행의 임직원을 시켜서 5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조사를 안 해 봐서. 가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겁니다, 비자금용. 그 사람이 지금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또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까 들어오신 다음에 들어서서 알겠지만 법률적으로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료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국세청에는 탈세로 회부를 해서 세금을 추징 받았어요. 이게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최고위급 간부들이 라웅찬 회장과 어울려서 골프를 치고 밥을 먹는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일 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법사위에서 받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1차 조사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주성영 의원 제가 감사원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주성영 의원 그다음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우리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의원 최근에 영남지역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된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여러 개, 한 30여 개 이상의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본 결과 가덕도와 밀양 2개로 압축돼서 지금 저희한테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성영 의원 오늘 아침 부산시장도 조속히 좀 결정해 달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걸 정확히 평가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작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6월이면 이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말하자면 이 2개 후보지를 놓고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성영 의원 2008년도 5월 21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북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남권 5개 지자체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동남권 신공항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때 배석하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주성영 의원 예. 이게 이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5개 지자체, 그

러면 물리적으로 가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본다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결정해야 되는……

○주성영 의원 종합까지 하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말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런데 워낙 지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문제기 때문에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있다는……

○주성영 의원 대통령께서 하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가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결정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현 입장에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성영 의원 저는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성영 의원 이제 이 가덕도냐 밀양이냐는 다른 영남권 4개 지자체로 봐서는 이제 부산의 최종한 말씀입니다만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다음 두 번째 또 가야 할 길이 또 인천공항의 견제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서는 투 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하고 원 포트 시스템(one port system)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단적으로 투 포트나 원 포트나 보기 보다는 인천공항은 인천공항대로 역할과 의미가 있고요.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도 완료했고, 그래서 수요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후보지 조사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가고 있는 걸로 볼 때 인천공항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꼭 대립적으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주성영 의원 우리 장관님의 그 발언에 아주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핵심 당국에서는 이 투 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영남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평가할 때 일본공항은 1장 3중 체제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리타 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은 이제 북경의 서우두공항과 상해, 홍콩, 광저우 공항의 4장 6중 체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중국은 인구가 16억, 16억입니까, 인구가? 16억 인구요 인도도 이제 12억 인구입니다. 세계 3, 4위 경제 교역국이고, 우리가 이 동남권 신공항이 개항하려고 하는 20년이나, 2020년이나 25년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로 이제 붙어날 겁니다.

첫 번째, 일본이 2장 체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인천과 남부의 신공항, 2장 체제로 먼저 선점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두 번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수요가 있고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27년경이면 이게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 이후에 대비해서 이 공항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고견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공항 전략뿐만 아니라 엄연한 현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성영 의원** 또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은 5+2 광역경제권이 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의원** 이것도 일각에서는 세계의 메가 시티하고 경쟁하기에는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기보다는 2+1 중부권과 남부권과 제주특별권 이렇게 나누어서 공항도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배치를 하고 그 배치 지점도 꼭 밀양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부의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지점,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역시 동남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표합

니다.

**○주성영 의원** 그다음 김해공항 확장설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해공항은 원래 K-1으로 군사공항이 출발점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현재는 군 공항입니다.

**○주성영 의원** 군사공항의 비행영역과 또 관제권 또 야간비행 문제와 결부해서 이런 동남권 신공항하고 결부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역시 김해공항은 의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때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대안으로서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는 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저희가 지금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성영 의원** 그리고 가덕도도 김해공항의 군사공항 비행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분명히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제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주성영 의원** 요지는 이겁니다. 항공 수요가 동남권만 하면 한 1300만 명쯤 되고 호남권까지 합하면 2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일본·동남아를 많이 가는데 중국·일본·동남아 가는데 비행기 한두 시간 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까지 가려면 5시간, 6시간 움직여야 돼요. 외국에서 바이어가, 투자가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월요일 날 담화에서 정부고속도로, 영종도 공항, KTX를 얘기하면서 4대강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평가할 거다, 반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 동남권 신공항 내지는 남부공항이 그야말로 적절한 장소, 이것은 가덕도는 아닙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적절한 장소, 밀양이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외국 투자가 유치돼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옳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용역 결과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시다만 항공 수요는 인천으로만은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감사합니다.

장관님이나 총리님 답변에 힘을 얻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주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광명 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민심이 무섭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졸속으로 강행 중인 4대강 사업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세종시 수정안 추진,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고자 한 북풍 조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날치기와 꼼수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에 대한 따끔한 경고였습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조차 이념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 여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교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 국가재정의 안정성, 양극화 문제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2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시기입니다. 4대강과

세종시에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금융시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안보 쇼크로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천안함 사태는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하고 환율이 변동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두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것은 총리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지켜보면 그날, 우리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한 그다음 날이지요. 그다음 날 25일에 우리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것을 보면 미국의 다우존스지수가 불과 1.2% 하락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2.75%가 빠졌어요. 거기다가 환율은 35원 50전이 오르고, 그래서 1250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4.1포인트가 빠져 가지고 1600대선이 무너져서 1570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하루에만 29조 원이 날아갔다는 것이 증권계의 얘기고요.

거기다가 국가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5년 만기물이 연중 최고치인 170bp를 기록했습니다. 이 170bp는 말레이시아보다 높고요, 그 당시 항상 유혈 충돌이 빈번했던 태국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태국이랑 똑같이 보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을. 이만큼 천안함 사태는 우리한테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부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총리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전쟁 불사에 가까운 말씀

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사라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다시금 나타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생산했습니까?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낸드 플래시, LCD, 자동차 등의 세계적인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도 그만큼 가치를, 그만큼 기업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기술력과 기업가치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아주 기분 나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긴장과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상품의 대외신용도, 국가의 경제신용도 이런 것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코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경제에 플러스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5월 24일에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5월 24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5월 25일에는 스페인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하고 환율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과 비교할 때 24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5월 27일 또는 28일, 5월 31일, 이렇게 해서 전부 회복이 됐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CDS프리미엄도 전부 회복이 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해야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적어도 지난 수년간에 있었던 일로 볼 때 남북 간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라든지 환율에 중기적인 영향도 별로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4월 14일에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데도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5월 31일에 무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방어 능력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위기를 견뎌낼 정도로 강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 등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잘 관리……

○**백재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체 어떤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실례를 좀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기계를 갖다 놓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파견 나갈 기술자가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의 천안함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서 기술자가 핑계를 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보는 현실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계를 설치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안 들어오겠다고 버티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한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휴전선 주변에 한 100만 명이라는 남북한의 중무장 병사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남북관계를 어쨌든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가 같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관계의 긴장과 함께. 이 2개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재정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밖이지요. 우리의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요.

그렇지만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좀더 길게 보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급박하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꾸 외국에서 오는 리스크도 많은데 국내에서 또 리스크를 더 조장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번 5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무력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전

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메시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 정도의 메시지는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든 통치권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처도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긴장관계를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좋지 않다, 적어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웬만큼 수그러들 때까지는…… 이미 그리스 건너서 스페인에 왔고 헝가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동유럽까지?

적어도 그런 상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더 부채질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백재현 의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합시다.

개성공단이 작년 연말에, 박왕자 사건이 나기 전 1500~1600명 정도가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박왕자 사건 이후 1000명으로 줄었고 지난 5월 20일 우리 정부에 의해서, 1000명으로 줄일 때는 북한이 요청해 일방적으로 조치한 사항이지만 우리 요청에 의해서 500명으로 줄었지요? 그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1000명이나 500명이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1000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 그러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만큼은 반드시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에서 6월 10일에 건의문을 통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딱 세 가지더라고요.

그전에, 개성공단 기업들한테 왜 그렇게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정부가? 개성공단을 야당 의원

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자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분위기는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재현 의원** 정부가 이런 남북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개성공단에 입을 못 벌리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백재현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 보고, 뭐를 요청하고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 알아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 건의문에 보면 100명이나 1000명이나 엇비슷하고 500명 구출하나 1000명 구출하나 협상해서 할 수 있는 일뿐이니까 1000명으로 해제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 요청입니다.

대단히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줄었다면 다르지만 우리 정부 의지에 의해서 줄인 숫자다 보니까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전부 동남아로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너무도 안타깝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청하는 사항은 1000명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확실하게 개성공단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일부라든가 적당한 부서에서 모아서 설명을 해주거나 문건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을 대통령께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성공단은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재현 의원** 검토한 것이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럼요 유지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문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께서 검토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개성공단만은 꼭 존속을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검토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단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검토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0일이 지났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그게 6월 10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건의문이?

○**백재현 의원** 건의문 내용은 그렇고, 대통령 담화가 5월 25일 날 나왔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검토해서 유지하겠다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용어의 선택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개성공단의 유지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백재현 의원** 그러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 방침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백재현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에서 심리전 시행과 관련돼서 자꾸 엮포를 놓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이어들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전 시행을 좀 재고해 달라, 그리고 강도를 낮춰 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리전과 관련되어서 뭐 스피커만 붙여 놓았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깐 그와 관련해서 심리전을 좀 유예시켜 달라, 재고해 달라는 것이 건의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성공단을 존속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도 수없이 여기에 종사하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른 곳, 외국에 나가서 투자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

에 아마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단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방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언제 시작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여부와 또 유엔안보리의 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백재현 의원** 총리님, 한 가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통일부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식량 배급을 중단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북한이……

○**백재현 의원** 식량 배급을……

○**국무총리 정운찬** 주민들한테요?

○**백재현 의원** 예, 중단하겠다는 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러면 어느 통치자가, 김정일이라는 악독한 통치자도 아마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중국한테 손을 벌려서 식량을 구해 오겠지요, 무엇을 내주던 간에. 많은 것을 내주겠지요, 북한의 선봉·나진 지구처럼. 더 많은 것을 내주면서 식량을 구해다 먹여 살리겠지요, 어쨌든 간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이런 기회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 계속 들어가고 그랬을 때 우리 같은 민족끼리, 또는 한반도와 같은 여건으로 봤을 때 그게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아니거든요.

가능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대북관계가 자꾸 긴장관계로 가면 더욱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국은 더욱 커지고, 그랬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성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동북사성’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아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 저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 반출이라고 그럴까요, 수출하는 수산물 그리고 골재 등이 안 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2억 5000만~3억 불이 북한으로서는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외국 물건을 사 와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특히 중국으로부터 사 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북한에 여러 가지……

○백재현 의원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양보를 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재 채취라든지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을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나름대로의 사과를 하고 또 행위자를 처벌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국민감정이라든가 정부 당국,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를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좀더 긴 호흡 속에, 긴 호흡 속에 챙겨 보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만, 개성공단 문제만은 우리 총리가 직접 챙겨서 존속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오래전부터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해주공단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신의주공단도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역시 엄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좀 사과를 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예, 들어가시고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꼼꼼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공기업 평가를 우리 기재부가 주관을 하지요,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백재현 의원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데 깜짝 놀랄 통계를 봤어요. 우리 320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줄어 들었어요.

한번 자료를 좀 띄워 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의 1만 5000개의 자리가 2006년에 1만 2000개, 2007년에 1만 4000개, 2008년에 1만 1000개인데 2009년에 와서 8500개로 줄어듭니다. 2007년 대비하면 무려 60%밖에 신규채용을 앓고 있어요.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이 통계가 맞습니까?

알리오에서 공개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 아마 이 PPT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저 자료를 직접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의 하나는 고용 중에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고용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선진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년 연장 문제하고요, 이런 것이 모든 게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거든요. 그러면 청년층의 고용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많은 이런 공기업·공공기관들이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을 해 오에 따라서 각 정부에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를, 개혁 시도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그냥 끝나고 말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또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해서 풀어갈 것인지 정부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청년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적인 문제,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와 관계된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고학력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 또 대학을 나와도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산업 인력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은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취직을 한번 했다가는 또 이직하는 율도 높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평균 청년실업률이 그 나라의 일반적인 실업률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 회복이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면서 지난 4월 달에 40만 명, 지난 5월 달에 취업자 수가 58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기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상의 오류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백재현 의원 어쨌든 지난 6월 8일 날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 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백재현 의원 보시면 우리 공기업들이 어떤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참고해서 보셔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어쨌든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청년 신규채용을 평가 항목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우리 평가단하고 별도로 독립된 평가단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전

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가하는 항목이나 요소를 놓고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예, 그래야만이 청년실업률…… 조금이라도 정부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백재현 의원 두 번째는 우리 금 거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금거래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우리 조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 타당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두 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는 금 거래 관련해서 밀수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는 세제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금이 국가로부터는 굉장히 화폐 못지않게, 달러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자산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무려 53t이 순수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금을 생산하는 것은 불과 200kg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밀수금이 있더라도 고금을 갖다가 수출하는 것인데 ‘고금을 수출하는 것이 과연 국부 유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 한국에서 그걸 귀금속 만들어서 고금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지금 상태로써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와 관련된 관리,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금을 포함한 상품거래소 도입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입장이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 속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도 여야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위기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세계와 경쟁해 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끊임없이 승리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이제는 여당도 내각도 대통령 한 사람만의 지시가 아닌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수당의 목소리도 가능할 때 국민과 함께,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의원 아침 일찍부터 멀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수영구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0.2%라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G20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다는데 서민경제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잘 사는 지역, 돈 많은 기업, 부자들만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도 간, 권역 간, 도농 간의 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 등의 고질적 병폐가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계층 간 소득격차, 교육·의료 분야의 불평등 현상은 공평한 출발과 공정한 경제를 저해하고 사회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그늘에 가려 따뜻한 빛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흔히들 반쪽짜리 성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경제 살리기도 균형발전이 기본이며 서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최근 사회갈등이 화두입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저는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총리님?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큼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좀 극단적이기는 하나 GDP의 20% 이상이 사회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온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에 온 국력을 결집해야 할 이 중대한 시점에 만성적인 사회갈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유재중 의원 총리께서는 사회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리가 지금 민주화 사회 또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호 신뢰 부족이라든지 대화와 협상 문화 부족 등 취약한 사회적자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보태서 사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불평등이 많이 있는데 그 경제적 불평등도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불신, 또한 소통 부재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균형감 없는 경제정책과 그로 인해 확산되는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작은 숫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플러스 0.2% 성장했고 금년에도 1/4 분기에 8.1% 성장했고 또 고용도 금년 들어서 몇십 만 명이, 5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아직 서민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는 중도 실용 정책의 기조로 '서민층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서민한테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나누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계속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고 또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해 준다면 아마도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체감 경기를 좋아졌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구도, 이로 인한 격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한 90%가 넘게 중소기업이고 또 중소기업 종사자가 우리 종업원들의, 근로자의 88%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받침이 없이는 대기업도 살아남기가 힘들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 계열의 11개 부품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999년 7.7%에서 지난해 상반기 9.3%로 1.6% 향상된 반면에 비계열사 부품업체 31개 사는 4.6%에서 2%로 오히려 2.6%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조차 이런 처지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 자료도 보게 될 것 같으면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원자재 구매 가격은 104.4%로 4.4% 증가한 데 반해서 납품단가입니다, 단가는 100에서 97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결과입니다.

대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구조조정 에 나서는 그 협력업체의 아픔의 실상을 이 증거가 보여 주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수익이 낙숫물처럼 흘러서 중소기업에 배분되기는커녕 대기업에서 터트린 샴페인 한 방울도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저는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한국경제에서 고용으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고 또 생산액으로 따지면 88%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으로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갖고 있고 저의 이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얼 하고 있는냐 하면 창업, 기술 개발, 또 인력 공급, 마케팅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 8조 8000억 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도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고 중견기업 육성전략 마련 등 정책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자재 가

격하고 납품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봐 가지고서는 자꾸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납품가는 대기업에서 자꾸 깎아 내리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품가 등 대·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도 상생협력, 협약 확산을 한다든지 또 납품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 중재라든지 불공정행위 감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유재중 의원** 글썄, 그런 대책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중소기업자를 만나 본다면 이렇게 지역을 돌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납품가 인하라든지 발주계약 취소라든지 환차손 전가, 하도급대금지불 지연 등 수많은 문제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겠지요, 정부가?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이 있다면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그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면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 실력이 있는 데도 있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부품 중소기업,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튼튼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것은 사실 몇십년 된 해묵은 과제입니다만 좋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중소기업에 가서 피고용인으로서 성공한 사람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영웅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재중 의원**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정책 비중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많은 비중을 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비가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중소기업이 살아날 때만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은 챙기고 고통은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

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자들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의 큰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업이 고용을 늘린다고 합니다만, 기계화 자동화 돼 있는 입장에서 고용창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변을 확대시켜서 그것이 활화산같이 분수처럼 솟아야만이 대기업도 수출되고 경쟁력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물론 대기업도 살아나야 되지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그러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중을 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사람이 많이 가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의원** 아니, 중소기업을 크게끔 만들어 주지 않는다니깐요. 대기업 감사실 이런 데에서 하청업체 협력업체 나가서 원가계산 다 해 가지고 딱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단가 책정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거래행위가 잘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산업독식행위랄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 진출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에서 전통적 중소기업인 산업공구류 유통까지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승자 독식 구조하에서 성장중심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리고요, 여기서 미래 신산업 발전은 아주 작고 강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마음속에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래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독일 일본 미국 등 OECD 국가 다수가 지역정부 단위의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사업자단체, 노동단체,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등이 함께 지역단위의 가칭 '생산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각 지역 간 건전한 어떤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산업을 그 지역에 설립하고 키우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노력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리고 총리님,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격차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정책에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희가 지방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아마 비수도권에 연 1조 이상 갈 것이고, 또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를 항목 전환할 것이고, 또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연 3000억 원씩 약 10년 동안 해서 3조 원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방과 서울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유재중 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오전에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평가 작업이 6월에 끝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6월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래서 2개 지역을 엄밀하게 평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유재중 의원 2개 지역을 놓고 엄밀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까.

장관님, 지난해 12월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동남권 허브공항의 필요성을 정책 건의했는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이 건의문을 보면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항공 수요와 물류가 급증할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건립의 시급을 강조했고 규모적 측면에서도 허브공항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유재중 의원 이 건의대로만 하게 된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물류처리시설이 연계되어야 하고 24시간 항공 운항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유재중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중단된다는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장관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 용역보고서에 환경평가 부분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소음이라든가 장애물 절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유재중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잠시 화면을 볼 것 같으면 신공항 건립 후보지인 밀양 하남읍의 이착륙 방향의 산들입니다.

만일 밀양에 신공항이 건립된다면 국제민간항공 공기구 기준으로 최소 15~26개의 봉우리를 100m 전후로 절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녹지 훼손으로 따지면 여기 여의도의 아마 1.2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봉우리를 절개하고 엄청난 녹지 훼손을 불러오는 공사가 아무런 마찰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제시가 됐고, 평가 과정에서 환경 요인이나 지금 말씀하신 산 절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유재중 의원** 공사 예정지 내에 사찰이 또 15 곳이나 되고, 아마 환경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생태계 피해가 클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항 건립 문제는 정치논리를 떠나서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우리 허브공항이니 만큼.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어떤 정치논리에 흐르지 말고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마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18대 국회 시작 때부터 국가균형발전특위라든지 예결위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

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기억납니다.

○**유재중 의원** 그때마다 장관님께서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조속히 이전안을 승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 의원님 지적대로 작년 9월 이전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 모든 작업들, 예를 들어서 이전 기관 승인 문제라든가 청사 설계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유재중 의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치는 않겠는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만도. 하여튼 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무슨 말씀인지 유념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유재중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국제적 경기침체의 소용돌이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 극복 방향은 서민 중심의 균형 있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법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서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표와 실적의 유혹에 빠져 특정 계층만 앞서가는 정책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갈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의 고충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경남 사천 지역구 출신 강기갑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조금 전에도 사회적 갈등 요인이 경제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GDP의 20%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어느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강기갑 의원** 예, 그 갈등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직 대화와 협상을 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또 신뢰가 쌓여 있지 않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불평등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양극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의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양극화, 노동자와 사용자의 양극화, 각종 양극화가 아주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썸,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는 이른바 글로벌화돼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돼 가면 경쟁은 심화되고 소위 시장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렇다면 글로벌화, 세계화는 추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배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문 닫고는 못 삽니다. 지금 한국하고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쪽은 문을 완전히 닫고 살고 우리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열고 살아가는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그런 양극화가 있을 때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문을 닫고 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의원** 바로 자본주의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최대의 모순 구조가 자본의 양극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갈등과 불화가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 탓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또는 과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좀 완화하자 이런 말씀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강기갑 의원** 이명박 정부는 완화 정도, 조금 아니라 일대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서민경제가 지금 죽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벌만 배 채워 주고 서민들 경제를 외면하니까 서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게 뭐니까? 물질적 풍요 좋습니다. 편리함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을 간과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한다는 그런 것들을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강기갑 의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국무총리 정운찬 양극화가 좀 덜 생기도록, 또 양극화가 생긴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기갑 의원 만족 정도가 아니고 정 거꾸로 간다는 그런 지탄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심의 기일이 6월 29일로 도래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사용자 측 위원들이 동결하자고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3인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100만…… 110만, 12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강기갑 의원 예, 110만인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110원입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노동자위원 쪽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노동자들은 5000원 이상, 5200원 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어떤 것이 적정 수준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최저임금제나 또는 최고가격제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때로는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 세워놓아 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임금에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도 취업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또는 굉장히 생활의 어려움, 3인 가족이 110만 원도 못 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근로장려세제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85만 8000원. 이 정도인데, 지금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작년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175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5월 달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

대답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21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넘어섰어요, 3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도 움직이고 또 근로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최저임금이 다소 높게 결정됐다고 한다면 그 임금을 쥐 가면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그것으로는 최저생활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메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성장증대율이 8.2%에 달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강기갑 의원 고용증대율은 2.1%라고 통계를 내놓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강기갑 의원 고용증대가 성장증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인정합니다. 그것은 산업구조가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래서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런 정도라면 ‘양극화’ ‘양극화’……

그렇게 GDP의 20%의 사회적 비용 손실로 작



용하고 있다면 이 85만 원, 이것도 85만 원인 줄 아세요? 71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지요? 휴일수당, 휴가수당 이런 것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은.

그렇다면 정부가 대기업을 수출 증대가 나고 우리가 성장이 이렇게 8.2% 얼마까지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그런 성장의 효과를 고용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을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있다, 그게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서민들이 이 정부에게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서민경제 살려내라, 또 하나는 뭘지 아세요? 4대강 중단하라, 남북관계 전쟁불사의 관계로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복원시켜라, 이 주문입니다. 그중에 서민경제 살려내라……

이거 총리님께서 결단 내리셔서 6월 29일까지 시한되어 있는 최저임금,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역할을 해 가지고 최저임금 5180원 이상으로 결정되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참히 파괴되는 4대강 사업’,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뿌리채 뽑힌 사진,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진입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14일 날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이고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강기갑 의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50년 동안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정말 우리 강이 너무 피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나 생명이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 책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도에

발간한 ‘생명이 깨어나는 강, 4대강 생태지도’입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최적·양호·보통·불량 구간이 73% 이상이 전부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강의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에서도 전체 지점 중에서 최적이나 양호라고 평가받은 곳이 78~79%입니다. 이 정도면 강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강 의원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수질도 개선하고 또 가뭄 문제도 해결하고 또 홍수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생태나 환경도 개선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면만 봐 가지고서 사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이 이 정도 80%, 또 보가 건설되는 그 주변에는 90% 이상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린다고 해야 살리는 건데 살린 것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살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진짜 살리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어머니인 생명산업인 다 죽어가고 있는 농업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서민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예측할 수 없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홍수의 피해, 가뭄의 피해를 많이 봤지만 기후 변화의 큼 또는 급격성 이런 것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4대강 사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물을 확보하겠다……

농업 예산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전문이 아니어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96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좀 나와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강기갑 의원 4대강 사업 중에 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96개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2조 3000억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거기는 평소 그 저수지가 담수율 70~80%를 유지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 독 높여 가지고 물량 더 확보해 가지고 갈수기 때 4대강에 물 내려 보내는 목적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까도 총리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까마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물 확보라든가 이런 아주 종합적인 수자원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수지는 주로 농업용 저수지로서 농사용 물 사용으로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넓혀서 저수지도 여러 가지 강 유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물 확보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수지 사업도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우리가 전국에 한 70개 저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수는 소수지만 가뭄 때문에 3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되어 있는 사업, 이런 저수지들에 1년에 예산 20~30억도 채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갈수기 때 물을 4대강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2조 3000억의 예산을 끌어 붓는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 절규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 못 지어서 어렵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목욕탕에 목욕하려고 물 채우는 것과 뭐가 다른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강기갑 의원 뭐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되는 저수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또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 증고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앞으로 물 문제를 이렇게 농업이다, 비농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전체 물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4대강에 물 채워서 뭐 할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의 문제는 홍수기에는 홍수 때문에 문제이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으면 강이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홍수도 방어하고 갈수기에 항상 물이 흘러가게 하면서 강의 생태를,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는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 저는 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의원 물을 흘러가게…… 보를 설치 안 해야지 보를 트도록 놔두면서 어떻게 물을 흘러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보라는 것이 의원님, 지금 우리같은, 여름철에 비가 제한적으로 오는 나라에서 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댐은 환경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대강에서라도 보를 통해서 물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장차 물 부족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깊이 생각하십시오. 농민들이 농사에서 쓸 물이 없어서 저수지를 막아 달라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면서 지금 4대강 사업에 갈수기 때 강에다 물 공급하기 위해서 2조 3000억 원을 틀어 넣는다, 끌어 붓는다…… 다른 데는 20~3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면서 4대강 사업에는 1년에 80억 원씩 하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기갑 의원 이걸 아마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거고, 우리 장관님은 제가 국토부로 갔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정말 저도 이 4대강 사업……

○강기갑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요. 마실 물 없는데, 사람들 마실 물 달라는 데는 외면하고 목욕물 먼저 채워 주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화가 자꾸 나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강기갑 의원 그게 극단적인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시면 저희가……

○**강기갑 의원** 그게 좋은 지적입니다, 받아들이셔야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수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도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중한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기갑 의원** 국민들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들어가고,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장관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 또 강제 수용당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농민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하천 내에서는 농사를 안 짓게 되어 있고 하천 내의 대부분의 경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여기에…… 국유지지만,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농민들에게 농사를 일부 짓도록 허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년 동안 농사지을 거를 영농보상을 해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강을 깨끗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자기 농지에 농사짓는 사람 강제 수용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까, 면적도 많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기갑 의원** 자, 그건 자료로 할 테니까요.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해당되어서 농사 못 짓고 농토를 떠나는 농민들 숫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 농지 면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현재 하천 경작지 총면적이 한 1만 5000ha이고요, 또 편입 농가가 한 1만 2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분들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래서 대체농지를 조성해 드린다는……

○**강기갑 의원**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요, 자기 농토 그냥 강제 수용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영농손실보상도 표준보상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농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정말 말씀드리지만 강제 수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사들이는 그런 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면 농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사 못 짓는 거 보상해 드리면서 준설토를 활용해서 농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분명한 것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시고요, 들어가시고.

총리님.

총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 정부에 주문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장관님은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들은 어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4대강 중단’하라는 그런 결과로써 선거 결과를 내주신 겁니다, ‘서민경제 살려라’.

그런데 지금 전연 이걸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전체 방향으로 보자면 4대강 살리기는 하겠다는 것인데 단지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4대강 본류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 남은 공정률 85%에 해당하는 예산 미집행은 국고로 환수해서 고용과 복지예산, 특히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편성돼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서 6조 원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자꾸 똑같은 답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어떻게 잘 하느냐에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서 더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국민의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박재완 수석께서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해당 구간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총리께서도 14일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새로 뽑힌 지자체 단체장 설득해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다면, 설득은 계속 할 건데 설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 말씀드렸고, 정 정말로 어느 지역에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역시 사업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기대하기는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반대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지금 보 설치 공사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른 많은 사업도 그렇지만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여러 의원님들이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지자체의 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 당선된 분들이 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의원** 4대강 예산을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여당 혼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4대강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고 국민들께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이거야말로 독재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떤 지역에서 정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보 설치도 중단할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이 4대강 살리기에 정 반대하신다면 저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반대한다면?

○**강기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서민경제 살려라’ ‘남북관계, 제발 이제 전쟁 불사의 관계로 치달아서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91조 원의 감세 법안 통과시켜서 곳간 채워 주고, 방송 넘겨주고, 은행 넘겨주고, 그러면서 서민들은 외면하는 이 양극화를 심화·확대시키는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귀 막고, 등 돌리고,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만 빼고 다 바뀌야 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걸 거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것은 안 바꾸어도 대통령은 바꾸든지, 대통령 생각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민주노동당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의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운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출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제가 국토해양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질문 내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0대는 분명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연령별로 보나 소득분포로 보나 그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6·2 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크게 실망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2년 반 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그들 중 상당수가 돌아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40대의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거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40대가 돌아섰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그 이유 중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40대 중산층에게는 이 주택은 전 재산이고 희망이고 어쩌면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래야 팔 수 없게끔 거래가 안 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된 데는 보금자리주택과 금융규제의 영향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백성운 의원**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값싸게 공급하는 주택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2012년까지 정부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임대주택 일변도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부 분양주택까지 해서 전혀 집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형 분양주택도 공급해 드리고 또 나머지 한 50% 이상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소득계층에 맞게 이렇게 공급하는데 이거를 밖에 멀리 나가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도심 근교에 있는 소위 비닐벨트나 창고벨트로 덮인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비교적 싼값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2012년까지 60만 가구이고 거의 분양·임대가 반반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라는 이런 별명을 얻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로또라, 말하자면 워낙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로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이거를 실수요자가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10년 전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5년 의무 거주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로또인 반면 또 규제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비교적 균형이 잡힌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금자리주택은 근본적으로는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대부분 짓고 있죠, 지금 분양되고 있는 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린벨트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민간업자가 그 토지를 사서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곳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해제를 해서 짓고 있고.

그 그린벨트라는 곳은 대부분 경관이 아주 양

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니깐 일반 지가보다는 땅값이 싸니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적게는 50% 아니면 한 75% 정도 분양이 되고 있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이거는 당연히 거기만 받으면 이 건 로또지요. 당연히 수천만 원, 수억의, 수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리미엄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에 보면 이번에 2차 당첨자가 나왔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번에 2차 예약을,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백성운 의원 사전 예약해 가지고, 누가 과연 로또 당첨이 되었느냐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10년 동안 팔지 못하니까, 원래 팔아야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건데 팔지 못하면 시세 차익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5년을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크게 로또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운 의원 그런데 이제 장관님 보세요.

우선 그렇게 별 이득이 없다, 10년간 매매 제한이 있어서 별 이득이 없다 한다면 왜 지금 다른 주택은 미분양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서울 시범지구 보면 12.2 대 1 또 2차 지구는 15.8 대 1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런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된다면 12.2 대 1 이런 정도면 12만 가구가 그걸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여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에 전용면적 최고 큰 게 25.7평형이죠. 이렇다면 한 35평 정도 일반 아파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저는 로또 이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해 보지 일반 민간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 보금자리주택은 아무나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여야 되고 규모도 소규모 주택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걸 제한된 시장이고요. 민영주택은 소위 중규모 이상 주택에다가 소득이 많은 사람,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보금자리시장과 민영시장은 구분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다만……

○백성운 의원 장관님 저도 지방행정을 해 봤고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주택의 문제도 알고 있고요. 청약주택 가입자라고 그래서 꼭 아주 저소득층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청약예금과 청약주택은 상당히 중복적이고요, 청약주택을 가입한 사람도 일반 민간시장주택에도 다 신청들 합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우리 정책의 초점이 무주택 서민, 아주 국한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택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정책이라면 일반 민간시장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것은 민간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고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마는, 분명히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낮게 공급하니까 ‘아, 이렇게 분양가가 낮아지면 민간주택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서 이럴 게 아니라 좀더 기다리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에 분명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명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반 지금 아주 모범적이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실상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5평 10평 정도, 5년 10년이 되어서 이제 좀 늘려 가겠다고 집을 매입을 하고 사는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3000만 원 5000만 원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DTI·LTV 규제요.

지금 이런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보금자리주택도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가서, 일반 민간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주택복지 차원에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러나 민간시장의 민간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도저히 그린벨트 살려서 할 수 없고 그 단가에는 맞출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깐 사람들이 민영주택 시장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주택시장이 단순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백성운 의원** 아, 저도 그 점은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분양가가 높다든가 여러 가지 주택 상황이라든가 금융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어울린 것만은 틀림없고요.

○**백성운 의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다만……

○**백성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끊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보금자리주택만이 지금 이런 상황의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규제,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금자리주택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더 다시 보시라는 뜻입니다. 저도 주택 서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정부가 하려는 정책은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그것이 민간시장을 왜곡시키고 민간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얼어붙게 만든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책 부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백성운 의원** 따라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백성운 의원** 하나는 임대 위주로 가야 된다, 저는 근본 어디까지나 지금 반반 정도로 돼 있는 것을 임대로 절대다수가 가고 극히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소형 분양주택, 분양이라면 아주 소형으로 해서 일반 민간시장에는 그 영향이

더 줄게 만드는 것이 옳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계속 개발해 나가는 문제는 저는 심각하게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에 국한이 됩시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도 큰 저항이 있고 우리가 그린벨트의 근본 추진 취지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두 점에 대해서 장관이 좀 의견을 주시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수용을 하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대주택 일변도에서 분양주택을 집어넣은 것은 그동안 워낙 분양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좀 살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래도 비교적 초년병이라도 좀 이런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도 분양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내가 평생 집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주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양주택을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다를 겁니다.

○**백성운 의원** 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민 주거복지라는 차원과 또 무주택 서민들의 이런 절망감을 없애 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 수도권에 DTI와 LTV 규제를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백성운 의원** 지금 실제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실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지금 LTV와 DT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러면 서울은 제외하고라도 경

기도 일원 수도권에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LTV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차별화해서 은행이 아마…… 지금 제가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45% 될 겁니다.

○**백성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2금융권은 55%인가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이런 금융 규제를 하는 정책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그렇습니다. LTV와 DTI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 금융권에 걸쳐서 현재 잔고가 가계부채가 700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가계부채가 약 350조,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TV나 DTI를 통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의 폭증을 비롯한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완적인 조치로 부동산시장에 자기주택을 가능한 한 자기자금을 많이 부담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나 중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나온 하나의 담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운 의원** 좋습니다.

가계부채의 감소,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방만한 대출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또 폭등이 되면서 거품이 일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가 맞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백성운 의원** 그런데 실제 주 경기도 일원, 수도권 일원에 지금 주택시장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희도 지금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말씀해 주시지요.

○**백성운 의원**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이것 국토부 자료입니다—9028건인데요. 최근 4년, 지난 4년간에 비추어, 같은 기간에 비추어 보면 거래량으로 보면 60%가 줄었습니다. 특히 일산, 분당, 평촌, 이 신도시는 72%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무슨 1인 다주택자로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봉급생활자, 아까도 제가 대전제로 했습니다. 마는 40대, 아주 모범적인 우리 중산층 가구에서 정말 열심히 저축하고 해 가지고 애들이 크면서 학교 조금 입학…… 또 그런 차원에서 그저 몇 평 아파트 좀 늘려서 가겠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는 상황이지요.

우선 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지, 멀쩡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내놓으면 거래가 되느냐, 갈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보금자리주택 등등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집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72%나 감소했다는 것은 이걸 예외적인 거래가 있다는 거지 일반 시장은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정말 평균적인 민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지금 기준을 완화해서 어떻게 하자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오늘이지요—제가 아침에 보니까 기재부 차관이 'DTI·LTV 규제는 당분간 완화 계획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공직자 모두도 '정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은 하면서도 그런 민심이 정말 어떻고 정말 그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않고 오늘 날짜로 그냥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요구 내지는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장관님께서 정말 평균적인 시민들의 실상이 어떤지, 이것이 어디까지나 투기를 막고 지나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모범적인 생 시민을 잡는 결과라면 이것은 정책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요.

그 점에서 정확하게 실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운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조감을 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비교적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울·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가격이 다소 하향이 되면서 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수도권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당장의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국 유의해야 할 것은 옛날에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고 자산시장의 버블이 건졌을 경우에 집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견뎌는지, 집값이 예를 들면 수도권 이내의 현재 집값이 과연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감내하기에 또 자기 역량에 비춰서, 지금 LTV나 DTI에 대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주는 비율이 좀 줄어서 적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고뇌가 바로 우리 정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답변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철학과 관련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에 흔히 보면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방 미분양을 해소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나는 그 점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의 미분양은 지방의 미분양대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미분양, 또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 점도 똑같이…… 왜 경기도, 이 수도권의 주민들은 지방의 미분양 때문에 아주 평균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수도권은 수도권 주민대로 소중하고 다 귀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은 그분대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타겟팅을 해야지 이거를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은 더 과대 규제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총리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총리님께서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백성운 의원 그런데 정말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성운 의원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어떤 구상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특단의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경제 문제나 고용 문제가 특단의 대책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고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안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청년 노동시장에서 수급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좀더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 또 대학 교육을 받아서 좀 허드렛일을, 허드렛일이라고 그럴까, 좀 어려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특별한 직업군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기 모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특단의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운 의원 뭐 누군들 특단의 어떤 묘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일류 국가로 갈수록 제조업에 의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이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일류 국가들은 정말 지식재산입국(知識財産立國), 정말 특허 발명 또 이런 지적재산을 이것이 하나의 상품화되고 창업이 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만 해도 최근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

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태스크포스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면면을 다 살펴보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임하는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나 인식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성이 뛰어난지.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지적재산 이쪽 부문에 좀 마음껏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데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이런 데 총리님 나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식재산에 관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알려진 게 오래 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의적인 인력 그리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장동력을 얼마나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식재산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초가 되는 지식재산기본법도 만들었고 또 이에 입각해서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투자와 각종 지원책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가시적인 계획이나 또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래서 이 지식재산 창출에는 저는 지방정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틀란타나 뉴욕,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본에도 교토 이런 도시가 이미 도시 자체가 지식재산 창출하는 산실로 표방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총력을 경주하는데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주민센터,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들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백성운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동사무소에 가 보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공공인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공간과 인력이 지금 그런 데 국한하고 있는 것이 이 미래 대한민

국 가치에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그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공공장소로 허용한다면 국민 누구나 가서, 정말 거기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실제 발명을 해보고 또 우리가 변리사 조직이 아주 훌륭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리사들이 거기에 무료상담을 하고 무료 특허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 나가면 저는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이 중앙정부가 그런 데 좀 인센티브를 과감히 재정보조금 등등으로 걸고 하면 저는 이 사회 분위기가 크게 진작될 수 있고 이 점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식재산주민센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거기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들이 교환되고 또 전문가들, 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식재산기본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짤 텐데 그 계획에다가 지식재산주민센터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지시요.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백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의화 백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이용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많은 교훈을 주셨

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는 지난 2년 6개월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쇄신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민주당에는 정부 여당의 권력 남용을 제대로 견제하도록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내내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부자 감세 문제, 무상 급식 문제,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정책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긴 해야 하겠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책적 또는 국책사업이 급방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정책 방향은 조기에, 저는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예측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진심 어린 변화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종시 예산에 보면, 이제 세종시로—행정중심복합도시이기 때문에—중앙행정기관이, 9부 2처 2청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 건립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7000억 원 전후입니다.

○이용섭 의원 118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섭 의원 예, 금년 예산의 중앙행정기관 건립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이다 기획재정부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

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도 해야 되고 토지 조성도 해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부청사 건립사업은 1단계 1구역, 1단계 2구역,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용섭 의원 예, 제가 얘기한 것은 1단지 2구역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1단지 1구역은 지금 총리실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 공정률이 한 25% 가까이 됩니다만 1단계 2구역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함에 따라서 현재 착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1단지 1구역은 공사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단지 2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하게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살아 있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면서 6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부청사 건립시기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현행법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작년 국회에서 예산이 1182억 원이 계상됐고, 그러면 집행을 해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제·무안 공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섭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러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 안 되면 금년에 집행 안 하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이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하반기에?

○국무총리 정운찬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용섭 의원 그러면 부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부결 안 되면.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부결 안 되면 현행법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예산이 따 있고.  
 바로 착수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제 빨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그리고 이전계획 변경고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결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저는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본인께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명분도 없고,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실체를 알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민심을 반영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참패를 하고도 정책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인적 쇄신을 해서 새로운 진영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방의 지도자를 뽑는 지방권력 교체 선거입니다. 그것은 국민투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국책사업을 하

라 마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이용섭 의원 제가 언제 국책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시도지사로 당선된 야당의원들 보면 그분들이 내세운 공약이 뭐였습니까? 세종시 수정안 막겠다, 4대강 저지하겠다, 이것으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강원도, 충청남·북도, 이런 데는 지지기반이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곳이고 민선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당선된 것은 이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겠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민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용섭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면 전남의 박준영 지사님은 4대강 사업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용섭 의원 박준영 지사 얘기를 전혀 잘못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준영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4대강 중에서 홍수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영산강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수질이 가장 나쁜 곳이 영산강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지금, 작년에 7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왔지만 4대강 중에서 홍수 난 데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주로 최근에는 강원도에서 났습니다마는 지금 기후……

○이용섭 의원 강원도는,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4대강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구…… 세계 기후 변화는 정말로 예측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섭 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4대강에 대해…… 세종시에 대해서 수정안 찬성입니다. 그래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처음에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제 얘기 들어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다음에 충북의 정우택 지사도 원안 찬성론자입니다.

○이용섭 의원 제 얘기 들어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분도.

○이용섭 의원 그동안 우리는 2년 동안에 수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세종시 수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민단체와 70%가 넘는 국민은 반대했습니다. 평행선을 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따르는 게 맞고요. 저는 여기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총리와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의원님 세종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세종시 부근의 대전·충남·충북 국민들이 선거하신 것을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세종시는 국책사업인데 지금 선거 후 일주일도 안 돼서 한 여론조사라든지 어제 그저께 한 여론조사들은 나라 전체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50%가 넘고.

충청지역에서도 세종시 찬성안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투표 결과하고 세종시 수정안의 그 타당성 또는 타당하지 않음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총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6월 7일 한국일보 창간 56년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때 똑같은 날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하거나 수정해라 하는 게 80%였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총리께서 왜 4대강 사업은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면서도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세종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6월 8일에 머니투데이와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대로 공감하는 것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조사 함부로 인용하는 것 아니지요.

이미 국민들의 뜻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4대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총리라는 자리는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국민의 꿈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치적사업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이걸 국민의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이미 공사 준공률이 15%이고 보의 경우에는 30%이지만 얼마든지 문제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다시 새롭게 수렴하시고요.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들 의견을 들어서 하루빨리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십시오.

이때 저는 세 가지가 반드시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속도를 늦추십시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자손손 누려야 될 소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왜 그런데 임기 중에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두 번째, 사업 규모를 줄이십시오.

왜 4대강 전부 파헤치려고 그러니까, 더 급한 지방하천, 소하천 다 놔두고? 그리고 준설이 5억 7000만t이 됩니까? 이게 남산의 11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를 22개나 막고, 이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 동의를, 합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하고, 제가 골목 상점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월요일 답변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는 바

람직스럽지 않다. 매우 유감이다.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더라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했습니다.

○이용섭 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렇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SSM(Super SuperMarket) 규제는 중소기업 보호, 국제 통상 규범, 유통산업 발전, 그다음에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은 SSM 규제 방안 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호에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두었고 이러한 기본 방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FTA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경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통산업……

○국무총리 정운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예, 더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총리실 조정 이후에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총리실 조정안에 없던 가맹점형 SSM이 규제 대상에 추가되어서 이에 대해서 외교당국의 우려가 아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엇저녁 TV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된 유통법과 상생법 있지 않습니까? 유통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생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역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므로 유통법은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고 상생법도 될 수 있으면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월요일 답변하고는 다소…… 이제 돌아가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생법안은 일

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 검토의견이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래서 오늘은 한 자락을 까시는 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생법안도 통과되는 게 총리의 기본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정부가 반대하면 무조건 따라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께 총리의 뜻은 상생법안도 통과시키는 것이 기본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예.

국가 부채, 부자 감세 문제도 이번 선거에서 부각되었던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파급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는 외부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저는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유일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지난 수십년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주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남보다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큰 어려움 없이 통과시키고 또 선제적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수십 년간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섭 의원 2009년도에 재정적자가 43조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상 30조 이렇게 해서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108조가 늘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의 국가채무를 407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공기업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미 677조에

이르고, GDP의 약 60%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재정부장관께……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러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공기업 부채도 말씀하시지 않았…… 그러셨지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국가채무하고 공기업 부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채무는 그야말로 채무인 데 비해서 공기업 채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업 채무와 연결돼 가지고서 자산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LH공사가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습시다만 자산 사이드를 보면 거기 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 부채를 받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총리의 분석은 매우 형식적인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채무는 중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는 다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선진국도 그러한 종류의 공기업 부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엔 국가채무가 너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의 8조를 수자원공사로 떠넘겼지 않습니까?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분식예산. 만약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는다면 그런 장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넣는 게 맞고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정운찬** 예,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들어가시지요.

장관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적정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아마 20% 좀 못 됩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하면 19.7% 정도 되고요.

○**이용섭 의원** 금년 기준으로 19.3%입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 슬로바키아, 멕시코, 일본 이런 정도 나라입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적정 조세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용섭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와도 비교가 필요하고요. 또 주변 경쟁 국가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수준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섭 의원** 세금 부담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조세부담률이 12%입니다. 핀란드는 3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핀란드가 파키스탄보다 더 못 사는 나라, 더 불행한 나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세부담률은 적정화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재정수요 그리고 다른 국가의 조세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한 21% 수준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말에 조세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 90조 하다 보니까 조세 재정조달 기능이 훼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유예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소득세, 법인세 유예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 내려서 20%로 하는 안’ 하고 ‘소득세 35%를 33%로 2% 내리는 안’이 유예가 돼서 2년 동안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이 되면 당초에 발표한 대로 2%씩 내려와서 20%와 33%로 되는 것으로 현재 세법 체계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용섭 의원**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2년이 되면 법인세율 22%에서 20%로,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의 건전성이나 다른 나라가 지금 최고세율을 부자들 세금을 올리는 경향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오늘 조세 분야의 제일 권위자이신 의원님께서 저를 아주 시련에 들

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원래 감세정책은 감세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부추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순환에 선순환을 기대해서 나중에는 중국적으로 세수 증대까지를 기대하는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출범하면서 발표를 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회복하고 맞물려서 2012년이 되면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은 것은 야당 의원 입장에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참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재정건전성 유지·확보는 모든 경제 운용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적자원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니까 거기에 추구하는 양 가치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놓고 보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율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조세부담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것은 전문가들끼리 많은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국회에서도 2012년 오기 이전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가진 분들이 시장에서 편익을 누린 만큼 기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그리되어야 시장경제

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 외국보다 턱없이 낮은 세율, 그리고 재정건전성 측면, 그리고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초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한나라당이 되게 싫어하는 세금이지요.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부분은 이미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08년 9월에 재산세로 전환하기로 발표가 됐고 이때 아마 국회에서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개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이용섭 의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세제개편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지방세로 넘길 때는 왜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을까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도 저와 함께 참여정부에 계실 때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때 종부세를 도입했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말씀 계속 하시지요.

○이용섭 의원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감은 그동안 역대 정부의 일관된 조세정책 방안이었습니다. 거래세는 경감하고 보유세는 중과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는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지방세로 가면 전국적으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해남과 같은 곳에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왜 폐지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이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요, 다른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할 것이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각각 프로스 앤 콘스(pros and cons)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조세제도를 간편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세는 경감하고 보유세는 증과한다는 취지에도 어떻게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을 하는 것이 거기에 순응하는 논리 정합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격차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것을 만약에 통합 운영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입 구조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등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 우리가 법안을 가져올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용섭 의원** 들어가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화가의 좋은 그림이 앞에 있어도 자기 시력만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5 시력을 가진 사람은 1.5만큼, 0.5 시력 가진 분은 0.5만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명백하게 제대로 민심이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시력이 하루빨리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출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국

민이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준엄한 질책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처럼 생산과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불황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일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우리 쪽도 제일 어려워진 업종이 해운업을 비롯해서 조선 그리고 중소 건설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 중에서도 특히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수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7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아까 백성운 의원님 질의에서도 경기도의 주택가격 하락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가 조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영수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주택종합계획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는 자산시장을 비롯

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을 여쭙 보는가 하니 기획재정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부서보다 크기 때문에 여쭙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백성운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DTI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중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를 DTI로 꼽고 있습니다. 아까 백 의원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위 은퇴자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높은 양도세와 DTI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계서는 DTI·LTV 이러한 것을 정부 규제보다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봐서 금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그렇게 맡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영업의 활동은 자율로 해 주되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모럴(moral)이고 기준이고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놓칠 수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신영수 의원** 그런데 DTI·LTV를 동시에 하고 나중에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DTI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일반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킬 때 내가 갚을 능력을 금융기관에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DTI, (Debt To Income)에서 내가 매월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보고 돈을 빌려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을 경우에 그 상환 능력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영수 의원** 그런데 은퇴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봐야지 은퇴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 그런 것까지 감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또 LTV는 뭐냐 하면 나중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담보가치가 하락을 하나니까요 그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정, 담보율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LTV는 지난 90년대 버블이 터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요 LTV 같은 것의 규제를 소홀히 해서 130%까지 이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부실의 늪으로 빠지는 하나의 지름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백 의원님 답,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이 나가면 당장에 시장에서 다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신영수 의원**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오시겠습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토해양위를 떠났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감사합니다.

○**신영수 의원** 장관님, 아시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올해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라는 겁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얼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전월보다 한 11%포인트 하락한 59.5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재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대폭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서울에 한 3200건 정도, 수도권은 한 1만 2000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예. 아까 백성운 의원이 다 질문하셔서 가지고 좀 뒷땅 치는 건데 어제 날짜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실거래가액도 30%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까 백 의원 지적했지만 분당, 일산, 평촌은 75%가 감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 4월에 2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년 4월 전체 미분양 건수가 11만 호입니다. 그리고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부족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뭐 의원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특히 지난 4월 23일 지금 통상보다 미분양이 한 4만 호 정도 많기 때문에 이걸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서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를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그런데 재작년부터 제가 질문을 하고 추구를 했습니다.

규제를 좀 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심도 있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해서, 이렇게 대응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게 시장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복 국면에 들었다고 하는데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이 건설경기 때문에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미 벌써 저희가 미분양 해소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나름대로 다 내놓고 해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효과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면밀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예.

장관님,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진입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한 2018, 1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예, 한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신영수 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는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하고 있고 현재 수도권에도 10개의 신도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은 주로 주택공급 차원에서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신도시는 계획대로 개발하되 추가 신도시는 가급적 안 하면서 도심재생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소형 주택들을 많이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신영수 의원** 예, 장관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세입자 보호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대단히 필수적인 일인데 법적으로는 이미 10~50%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기간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아직 이런 게 확실히 되지 못해서 사실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세입자 관련해서는 순환 임대주택을 좀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미 순환임대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한 50% 정도를 저희가 이제 소위 순환용으로 공급해서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소위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대책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지금 상가 세입자 문제가,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뭐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는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 소위 순환 임대상가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한조건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라든가 임대상가 부지 확보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용산 참사도 이 건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도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신영수 의원** 제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면 한 40건씩 올라옵니다, 개정안이. 또 도축법에 있는 정부 지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

각은 어떠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지적대로 역시 이 도정법과 관련한, 도시 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좋은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현재 도정법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신문 보고받으셨지요, 오늘요, 판교의 월든힐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신영수 의원** 최고 몇 대 1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대 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한 11 대 1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데요.

○**신영수 의원** 평균이 11.4 대 1입니다. 그런데 최고가 688 대 1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만 유독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아마 디자인 등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는 어떤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쪽이 사실은 처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다 계산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상당히 비교적 분양가가 상한제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가구당 얼마씩 손해본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손해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신영수 의원** 원가 기준해서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영수 의원** 제가 지역이 성남이라서 이것 미리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제한 때문에 원가를 못 미치게 받았습시다. 그 설계는 아시다시피 국제 공모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1억씩 손해를 봤다는 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억 손해 봤습니다. LH 적자가 큼니다. 이 상황에서 300억 적자 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영수 의원** 이 손해는 전부 다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에 시행되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 그래서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입주하 됩니다. 금년에 32만 세대가 입주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12만 세대로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줄다 보면 전세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속된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 이제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역시 분양가 상한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그런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고 지금 주택이 상당히 하향 안정세인 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사실은 주택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민간 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미 그런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논의를 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그러니까 부실 건설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만 건설한 건설업자가 정부의 시장질서에 반하는 시책 때문에 부실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공공택지 내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그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는 자율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최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급자리주택이라든가 새로 짓는 공공주택은 특히 그린홈으로 해서 지금보다 에너지를 한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주택으로 하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함께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수 의원** 현재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단순히 폐지한다, 살린다 하는 측면보다 지금 여건이 바뀌고 또 그린홈이나 그린주택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코스트를 제대로 반영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의원** 그린벨트 문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 취약지구인 경우에도 현재 3층, 제가 알기로는 3층입니다. 3층으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재산세는 올라가는데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린벨트가 아니고 해제된 지역 말씀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지적대로 역시 그런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린벨트를 제대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층고 완화 문제는 제가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해제된 지역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작년에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이고 금년 7월이면 조사가 마무리될 걸로 알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 조사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제정이 라든가 장애인 주거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주택정책을 다시 재정립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신영수 의원** 총리님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신영수 의원** 지방선거 후 국민들은 중앙정부하고 정치지향적인 지자체장 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일부 지자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겠다. 저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또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국가사무가 규정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 국가사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가 고유의 사무입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 국방, 사법, 금융·물가 정책, 국가하천,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주로 국가의 존립이나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처리하는 사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사무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4대강 사업은 국가사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 4대강 사업의 근거가 하천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3조를 보면 “국가는 하천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자체의 의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한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사업 등을, 국가사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치신념을 이유로 중단·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자치권을 벗어난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충청지역 단체장이 세종시 사업을 저지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 등의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국가사무로 분류에 대한 사업 자체를 지자체가 중단·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영수 의원** 지자체장들의 이러한 월권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먼저 중앙과 지방 간 주요 정책에 대한 공유와 협의 등 쌍방향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하고 정당한 국가지책의 추진을 미루거나 게을리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지방자치법 제168조에는 행정협약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를 활용할 의향이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어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어떤 것이었지요?

○**신영수 의원** 신문 안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신영수 의원** 아닙니다. 4대장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그쪽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정 구역에서 사업을 정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수 의원** 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계신 것 같습니다. 중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과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공식으로 건의할 경우에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수 의원**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건의를 해 오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총리하고 전혀 협의 안 한 내용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신영수 의원** 총리님하고 협의 안 한 내용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영수 의원** 행정협약조정위원회를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성남시 40년 숙원사업 풀린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

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감안해서 추가 조치를 할 의향이 좀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신영수 의원**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를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을 하면서 활주로 변경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연기에 연기를 계속 거듭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 그 진정성이 좀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경우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대한 적시성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가 군 비행장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혹시라도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영수 의원** 미리미리 좀 하시지 그것을 계속 연기, 연기 하나까 이렇게 된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국방부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것을 토대로 약 4개월 동안 15개 군 비행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정립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총리, 광주대단지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대학 재학 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자세히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서울시 개발 과정에서 현재의 성남시로 집단 이주된 분들이 1971년 분양지 대금 등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이게 비폭력 시민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하고 언론은 이 사건을 폭동, 난동으로 매도해서 왜곡한 사실이 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설 용의가 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사건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세부 내용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당시 1971년 국무총리께서 국가안보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사건을 전매 입주자들이 일으킨 난동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부에 정식적인 명예 회복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건들은 많이 진상 규명됐는데 광주대단지 사건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이 사건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원인과 잘못을 떠나서 개발연대에 일어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의원** 총리께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많이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전체 길이가 128km입니다.

그중에 몇 %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속한 것으로 하면 80%가 넘지 않나 생각……

○**신영수 의원** 그렇습니다. 8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도로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도로의 명칭은 그 경유지가 아니라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닙니까? 특히 외곽순환도로는 외곽 순환의 의미를 고려해서 해당 도로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 도시명을 부가하는 경우가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총리님 의식이 좀 걱정됩니다.

아직도 지금 개발시대의, 경기도를 서울 외곽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그래서 제가 표현……

○**신영수 의원** 봅시다.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는 전부 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서울톨게이트’ ‘동서울톨게이트’ ‘서서울톨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 있으면서 ‘서울공항’입니다.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변두리 외곽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총리께서도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라는 명칭은 해당 도로가……

○**신영수 의원** 아니, ‘경기순환도로’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주장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 해당 도로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발전과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도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의원** 지금 톨게이트의 명칭이 지역하고 다른 곳이 전국적으로 5개나 됩니다.

이제는 주민의 자긍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개발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민의 자긍심을 세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뒤서 주민들의 바른 정체성, 자긍심을 세워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 원하신다면 공공시설 명칭의 합리적 제정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2년에 완료가 됩니다. 157개 중에서 106개 기관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전이 되는 수도권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에 대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 또 미래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수 의원** 총리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년 뒤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종전에 너무 의욕적으로 된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는다고 할까, 영향을 받게 되는 기존의 도시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일야십기(一夜十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저녁에 열 번을 일어난다’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팠을 때 하룻밤에 열 번을 일어나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서민경제를 보살피고 챙기는 마음이 바로 ‘일야십기’와 같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 경기의 활성화, 서민주택 문제,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의 문제 등으로 아파하는 국민들을 보듬고 살피는 일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절의 고장, 충남 아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국회에 있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혹여 선거 때마다 그래 왔던 상투적인 수사어 언급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로가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께서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정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내각에 어떤 조치와 지시를 하였습니까? 국정 흐름이 어떻게,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내각에 내린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두 차례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각이 소명감을 갖고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최대한 받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 운영에 힘쓸 것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난 6월 14일에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도 재점검하고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 및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총리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은 내용상으로는 별도의 조치나 지시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국정이 달라져야 하는지 하는 것을 총론적인 그런 언급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내각의 뭐가 달라지고 우리 공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방향점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 계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국가가, 이 국민이 뭘 원하는지 총리께서 그 직책의 무거움과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십시오. “옷깃을 여미고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는 취임사의 말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겉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양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작년 국제적으로 어려

운 때인데도 0.2%나 플러스 성장을 했고, 또 금년에도 지금 1/4분기에 8.1%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양극화 현상’ 때문에 잘나가는 사람들은 잘나가지만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많아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예,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하고 국민의 체감지표 사이의 온도 차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활 물가는 급등하고, 특히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부동산 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학자 출신이면서 취임사에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현장행정, 피부행정’을 강조했던 총리께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총리 입장에서, 물론 경제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왔고 추가로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우선 중소기업도 많이 봤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에 가서 그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고, 또 농업부문을 위해서는 용인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역시 또 농업부문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서 조금 뒤쳐진, 아니면 조금 덜 빨리 나가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고, 또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지 또 연희미용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부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나가는 데에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명수 의원 아직은 미흡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명수 의원 아직은 미흡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여러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선거에 나타난 민심으로 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나 역시 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이렇게 총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들이 와서 피부에 닿는 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친서민적 실용정책,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해 온

것들이 그렇게 별다른 효과가 없고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가 관리, 정부가 마음대로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서민 물가를 위해서 어떤,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건설업 구조조정 문제, 규제 숨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이 높아지고 또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물론 우리가 물가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책을 한국은행이 할 것입니다만 정부에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 조절입니다. 어떤 부분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라. 예를 들어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은 하나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명수 의원 예,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천안함 관련, 뭐 오늘 질문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 참여연대 측의 안보리 의견제시 동향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제인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저께든가요.

○이명수 의원 전혀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전에 그런 동향을 파악을 못 했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명수 의원 사전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일부 NGO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한다는 것을 예상을 했었을 텐데 전혀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러면 당장 이 안보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메일이건 어떤 다른 형태의 서한이건 안보리에, 안보리 의장한테 간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안보리 이사국의 사람들한테 전달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라든지 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와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마당에 한국 국민들이 와 가지고서, 사실 별로 설득력은 없는 문건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조사 과정이라든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이처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부에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는데 챙기지 못했다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미리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명수 의원**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명수 의원** 어떤 조치계획, 참여연대나 또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냐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대정부질문 받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아직 생각을 제가 많이 못 했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님, 대정부질문에 바쁜 것하고 이런 일 챙기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검토를……

○**이명수 의원** 바빠서 그것 못 챙긴다는 건 말씀이 안 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검토를 지시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수 의원** 일은 일이고 질문은 질문……

○**국무총리 정운찬** 며칠 되었습니까, 지금?

○**이명수 의원**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대통령께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세종시 관련해서 밝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명수 의원** 총리의 입장도 다름이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의 입장하고 제 입장 이요?

○**이명수 의원** 예, 다름이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다름이 없습니다.

○**이명수 의원** 만약에 세종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아서 끝내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수정안이 부결……

○**이명수 의원**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우리가 범치국가 아닙니까? 원안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수 의원** 후속으로 세부 조치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단지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수정안과 원안과 관련해서 충청지역 분들이 원안대로 하더라도 주요 기업들, 유치 예정인 네 기업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수 의원** 세종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현지 주민들의 애로와 피해 대책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에 앞서서 혹시 저의 최근 입장과 추진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고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명수 의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명수 의원** 답변 이미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도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나 제대로 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수정안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 저 역시 생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세종시 문제를 방지할 경우, 그냥 방지할 경우 국론 분열과 기업의 애로

가 심화되고 지역적·정치적 균열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 전체 여론은 수정안 찬성이 더 높고 정부가 지난 3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대의정치 원리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쟁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 지연에 따른 현지 주민의 애로사항과 해소 대책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명수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시는 인프라 건설 및 부지 조성 등 대부분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정안을 추진하면 도시 개발 사업은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지고 각종 인프라도 2015년까지 앞당겨집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원주민 대책이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아파트, 경로 복지관 등은 원안에 비해서 공급량을 2배로 늘렸으며 주민 취업 대책도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무엇이든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 이미 말씀하신 건데……

○국무총리 정운찬 다 끝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수정안 추진이 안 돼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옳게 받아서 옳게 민심을 보고 올바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현지에 안 가 보셨지요, 최근에는?

○국무총리 정운찬 가 봤습니다.

○이명수 의원 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오래 전에 파헤친 땅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그런 피해가 있지만 지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이후 그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 다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새롭게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지방이 활력화가 안 되고 신도시 개발이 부진한 이유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법률상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 이것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가 위원장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요?

○이명수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뭐, 저희 정부에서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수 의원 총리님이 위원장입니다, 총리님이.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글썄요.

○이명수 의원 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총리가 된 후에는 안 해 봤습니다.

○이명수 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이 회의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 문제 여러 가지 있고 중요한데?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총리가 참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명수 의원 여러 가지 일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국회 답변 때문에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안보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못 챙긴다는 답변은 정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다 지시를 했……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부 지시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전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명수 의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총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정부질의를 연기하시든지 하십시오. 지금 제가 모든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수 의원 일의 우선순위와 국정 현안과 관

런해서 이것을 챙길 것 챙기고 조정할 것 조정하고 통제할 것 통제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수도권정비위원회 대단히 중요한 기구와 자리입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여기서 다루야 되고요. 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예외적이고 개별적, 선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일반적, 포괄적으로 풀어 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이래 수십 년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국토정책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도권 인구가 연간 이삼십만 명, 차량은 1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교통 혼잡, 환경오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해서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가 몇 조라고 지난번에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교통연구원에서 십여 조, 14조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명수 의원** 사회비용이 수십 조인데 지난번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5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것 지금 잘 판단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은 14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나마 이런 규제 조치가 없었다면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화 문제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취임사 때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야말로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녹색성장 국가를 지향하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마저 훼손하는 이런 정책 장기적으로 필요니까, 이게 과연?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그린벨트, 저도 다른 누구보다도 그린, 녹색을 좋아하고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 푸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최근에 풀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였습니다.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지역이 많고 있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도권정비위원장으로 수도권 문제를 수도권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 전체의 문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께서서는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 개발사업, 이것은 100만 평을 얘기합니다. 대개 어느 정도 사업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한 13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12개이고요.

그중에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대단위 개발사업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은 없고요. 한 5년 이상 돼서 아직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게 파악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공무원 출신인데도 그러시네요.

아산 신도시 사업 언제……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92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예요?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18년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명수 의원** 물론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1단계 사업은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대부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아주 미미한 면적이고 대부분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2단계 보상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시다마는 그곳이 지금 수요 부족이라든가 수익성 문제 또 LH공사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미 벌써 공고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LH공사로 하여금……

○**이명수 의원** LH공사 자금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LH공사 채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채무가 지금, 부채가 109

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120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명수 의원 그것 해결 안 되면 그러면 신도시 고시만 해 놓고 10년 넘도록 집행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문제는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6·2 지방선거 때 당시 여당의 대표가 현장에 와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신도시 주민 보상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유세를 한 적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명수 의원 사전에 전혀 협의한 적 없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명수 의원 잘못된 일이지요, 이런 유세나 이런 발표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지금 이것도 LH공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렇게 장기 미집행, 10년이 넘는 대단위 개발사업이 50만 평 이상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1억 4000만 평입니다. 웬만한 시·군의 면적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문제는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벌어진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수요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사의, LH공사의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그러면 LH공사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수 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신도시 예정지구나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택지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뭐, 승인이나 이런 건 최종적으로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정부의 선부른 발표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국책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적시성 이런 문제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이거를 별도로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의 장으로서 통과시켜서 그대로 고시가 되지 말고 별도의 프로세스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보완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신도시대책, 지금 장기 미집행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미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LH공사와 저희 국토해양부 쪽에 같이 지금 합동으로……

○이명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LH공사나 국토해양부 차원이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게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재정부, 관련 부처가 이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역시 저희가 창구가 돼서 정부 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두 번째로 이렇게 아산 신도시처

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에 이런 피드백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사업, 5년 주기로 재정비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명수 의원 재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예.

○이명수 의원 그리고 10년 넘으면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취소해 주지요? 신도시사업에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피드백이나 보완 작업들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도시사업은 신도시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마무리 짓고 하느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아니, 16년이 된 신도시사업을 자금난이나 이것 때문에 또 기다리지 말고 10년이 넘으면 도시기본계획처럼 그걸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할 건 해제하고 취소할 건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 개정이 필요해야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명수 의원 신도시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이걸로 다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거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예.

또 장기 미집행 신도시의 경우에 재산권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이걸 허용하는 행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대 법안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택촉법 6조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여기서 즉답하기에는 뭐 합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보상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그 주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또 지금 아산 신도시의 경우에 대토 구입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상환기한 연장이라든가 세제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장기 저리

금융방안, 정부 차원의 친서민 정책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해당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이 문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신도시 내에서 단계별에 따라서 세제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1단계는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2단계는 200만 원, 300만 원이 된다는 얘지요. 이거는 세제를 개편할 때 경과규정을 제대로 안 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원주민의 이탈입니다.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지방 신도시의 경우 몇 %나 됩니까, 대략?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숫자는 가지고……

○이명수 의원 제가 파악키로는 2, 30%도 안 됩니다. 이것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생계와 연계된 그런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신도시 도시설계에 저촉되지 않는 공공시설, 종교시설, 이거 매입 대상에 시키지 말고 제한적으로 존치시키는 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체 매수해서 전체를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일부 존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명수 의원 그걸 제도화해야 됩니다. 이거 시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법령화해야 되고 의무화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필요할 경우 개선대책을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이 신도시 개발 방식을 우리가 전면 매수해서 전면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으면 보

상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 탕정 LCD 단지가 있어요. 그걸 왜 LH공사가 다 사 가지고 삼성한테 다시 분양하느냐고요. 삼성한테 주변 실수요자가 더 잘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적절한 시기에. 그런 방식을 아예 제도화시키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보상금도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법상으로는 현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가 채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보상. 이것도 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채권 보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최소화시켜야 되겠지요.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채권으로 보상하는 그 범위가, 포션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부동산에서 나온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메리트를 드리면서 채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토지보상법에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런데 채권 보상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시정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세종시 때 거론이 되었던 건데 원형지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해서 원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방식을, 이걸 한번 제도화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전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명수 의원 원형지 공급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침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합니다라는……

○이명수 의원 법률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택촉법이나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이 제출된 걸로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수 의원 그러니까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필요한 원형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지금 혁신도시나 다른 기업도시를 위해서 지금 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하나, 대체로 장기 미집행 대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을 한 지 5~10년 된 게 있습니다. 이걸 너무 악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런 MOU 하나 믿고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겠습니까라는 MOU 체결 이후에, 또 MOU 체결 이후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챙기고 체크하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체크 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함부로 벌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지금 아산 신도시 경우에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반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아파트 단지만 세우다 보니까 각종 주변의 난개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편의시설 문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 편의시설의 기준요건을 법령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률로는 못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어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함께 요건화해서 이게 함께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건 이미 도시의 기본요건이 되려면 그런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로 나름대로 했습니다라는 의원님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기존 도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도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신도시, 전혀 백지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나중에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계획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번 검토에 포함해 주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 국토해양부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련 부처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나라와 정부는 발전과 번영을 지속했습니다. 이 정부도 국민의 소리에 더 가까이, 더 크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단상에 올라와서 대정부질문을 합니다마는 늘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 답변한 내용이 이 자리에서 질문 답변으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언한 속기록을 다시 보니까 또 반복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만 끝나는 이 질문 답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정부가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주민과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대규모 신도시사업,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말로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의 진정한 아픔을 닦아 주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전 의원은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一鎬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우리 홍재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 을 출신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자,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생업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시장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질문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변을 하였고, 솔직히 장관님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각별한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표는 이렇게 좋습니다마는 정말 서민, 중산층에게 이 온기가 어떻게, 잘 퍼질 것이 언제쯤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부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표경기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사정이라든지 또 일반 민간 부문의 소비라든지 일부 기업의 투자까지 지표경기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민간 부문에서도 이제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것이 시간이 언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나쁠 때는, 나빠질 때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고요. 회복이 되면 제일 늦게 느끼게 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라 생각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러한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지표경기 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柳一鎬 議員** 장관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이때쯤이면 이제 우리 서민들이 어떤 걸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거 현장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직 그렇지 않다, 좀 갑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원인, 왜 다르게 느끼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쯤이면 성장률도 높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사는 게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마는 1분기 8.1% 성장률 이룩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柳一鎬 議員** 이것 참 보통 일이 아니고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에게 느껴졌는가, 이것은 다분히 반동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마는 실제로 우리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 그 특정품목, 예를 들면 쇠고기, 과일 가격이, 이견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는 소비자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다, 무 가격은 140% 넘게 올랐다, 또 이런 특정한 품목에서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도대체 소득은 별로 늘지 않

았는데 쓸 것은 많아진다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MB 물가라고 해서 벌써 2년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저는 이런 식의 물가관리라는 것이 효과가 있나 하는 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물가를 사실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관이 경제운용을 주도 할 때 있었던 관리물가를 지금에 와서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52개가 사실은 이상하게 이름이 붙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52개 품목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생필품 중심으로 52개를 선정해서 정부가 특별히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겠다 해서 선정한 것이 52개인데요.

그런데 마땅히 사실은 정부가 시장기능을 도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마는 사실 관리라든가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경제정책당국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 국민들이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비지출·비소비지출이 예를 들면 사회보장 부담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난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소득 5분위배율이 2006년 5.39, 이것이 전국 가구입니다. 그것이 5.39였는데 5.76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상대적 빈곤율 역시 늘어났습니다. 마는 장관님 다 잘 아실 테니까 숫자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양극화, 저는 이것이 양극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재분배 악화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 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불만스러운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것이 급격

히 나빠졌다는가 유독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빠졌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이 수치가 계속 나빠진 것 잘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불만스럽게 느낀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일반 서민이나 대기업에 대칭되는 중소기업, 또 영세자영업자 이러한 경제적 취약자들이 여기에 제일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소득이 어려울 때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에서 발생해서 쓸 수 있는 자산 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다른 임금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가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빚도 갚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자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자산소득도 없으면서 일정한 임금소득도 담보되지 못하는 서민들이 어려워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인력을 가지고 직접 가족 구성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소비가 줄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이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고용이 성장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경제가 성장을 해야 그 과정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경제성장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사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복지예산을 늘려서 재정에서

그냥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극히 단기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4월 5월 달 취업자 수가 4월 달에 40만, 5월 달에 58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경제적 취약계층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마는 상당한 속도로 나아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4·5월 취업자 수 증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그렇게 대폭까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4분기에 8.1%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난 같은 분기의 기저효과에 많이 기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규모로 보면 위기 이전의 수준을 이제 회복한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도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나라도 작년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높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또 높은 데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선방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출도 그렇습니다. 수출도 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쪽에서도 선방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소기업이나 내수 쪽으로 연결이 빠른 속도로 되지 않고 있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해결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예, 그 연결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워낙 엄중하다보니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도 그것이, 물론 그 장기적인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수 증가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청년실업 문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되풀이되는 질문과 대답이고 여기에 무슨 특단의 대책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 나름대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제를 도입한다든지 열가지도 더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구인구직 시스템을 연결시킨다든지 또 고용유지금 내지는 고용촉진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떤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자리는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련의 그 사람한테 지급돼야 할 최소한의 연봉이랄까요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잡이 형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지요.

그리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공공 분야의 일자리는 결코 단기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수출을 해서 번 돈이 왜 내수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여기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저희 쪽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수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내수를 키우려면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줘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안으로 된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로 그 나라 경제를 운용해 온 대표적인 나라들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내수의 중요성을 다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를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섯 가지 서비스산업을 그 루핑을 해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부분을 지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매일 이런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할 것이냐 하는 데 결국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국회의 협조도 절대 필요합

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관님과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사실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은 제가 아마 지지난 임시국회 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고용에 즉각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시다마는 이게 사실은 결국 우리 국민 세금을 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새로 창출해 나가는, 정부에서는 암만해도 기업이 민간 부문에서 창출해 내는 일자리에 비해서는 그것은 또 반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이, 적어도 중산층이 많이 느끼는 피리의 중요한 부분이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소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소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아파트라든가 주택일 텐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오전, 오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급감했다, 이것은 이미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도 저는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5월 10일 날인가요? 장관님께서 LT V·DTI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늘 또 1차관님께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아마도 지금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수도권외 다른 부분, 강북지역, 강북지역 지금 거래량 급감한 정도를 보면 5월 달에 강북 14구 64.3%가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LTV나 DTI의 일부는 완화를, 그 지역에 한해서, 강남 3구는 제외하고 혹은 버블 세븐 지역은 제외하고 좀 고려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LTV와 DTI가 이중규제의 속성이 사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의 의도는 사실은 가계의 대출의 건전성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柳一鎬 議員 그런데 이게 사실 또 유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렇게 부동산가격도 안정되어 있고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전향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은 LTV나 DTI 등 금융규제는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까도, 답변이 되풀이됩니다마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존속되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택시장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직은 부적절하다 하는 인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요약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사실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금융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이 우리가 하도 아픈 경험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중의 한 구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산층의 경우 이것은,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柳一鎬 議員 이제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또 재정건전성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익

스포저(exposure)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금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경기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다시 앞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이 부분은 지난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상당한 폭으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럽 4~5개 국가에 걸쳐 있는 익스포저라든지 수출 점유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그리스에서 종결이 되고 끝나면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EU에 가입한 나라 27개 국가 중에서 유로라는 공동통화를 쓰고 있는 유로존에 가입된 나라는 아시다시피 열여섯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여섯 나라 내의 경제 발전의 정도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지금 무역수지 상황이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여기에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 부분에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고요. 제일 위에, 국제수지 상위 및 좋은 데가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우선 환율과 금리를, 유로존이라는 공동통화를 씬으로 인해서 각 국가가 자기들의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경제에서 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많이 나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디프리시에이션(depreciation)이 돼야 되지요. 국제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면 환율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달러기준화가 내려가는…… 환율 인상이, 지금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국제수지 균형이 조정되는 것인데 같은 유로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불확실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

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라파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EU를 구성하고 있는 열여섯 나라가 이 유로존을 유지해 나가고자 할 것이고 세계적인 공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당장에 거뒤틀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라파 시장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인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이른바 출구전략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출구전략 얘기는 벌써 1년 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출구전략 역시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전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20 국가들 중에서, 또 아니면 G20 소속이 아닌 국가들 중에서도 소위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준비했던 나라들에 그리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생각해 보면 출구전략의 시행을 좀 늦추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태가 없었다면 국내외 소위 불안정(uncertain) 이런 것이 적어서 출구전략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나라도,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또 헝가리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멍청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도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얘기합니다마는 본격적인 출구 시기는 너무 빨라도 되지 않고 너무 늦어도 되지 않고 적절한 시점을 봐야 한다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월 안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면 아직은 지금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柳一鎬 議員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부득이 재정 문제 또 국가채무 문제,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의 확장적 정책의 중요 변수랄

까, 수단은 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셨고 또 우리 장관님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더불어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또 증언부언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것이 재정에 있어서의 부담, 그러니까 재정이 실제로 앞으로 확장적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근본은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 출구전략하고 연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피스킬 데피시트(fiscal deficit), 재정적자가 GDP의 -5%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결산을 해 보니까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가 재정적자를 2.7%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5% 정도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 재정안정화 계획에 의해서 2013년 내지 2014년에는 재정이 균형으로 들어오는, 재정 적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중은 30% 초반 내지 중반 대에서 유지되도록 그런 목표로 지금 소위 세출 구조조정 또 세입 면에서의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축소, 세원의 투명성 제고 이런 여러 가지 세제와 세정의 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내겠다는 우리의 목표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더구나 의원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30~40년, 40~50년 동안에 아무런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해 오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국민의 또 우리 국가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柳一鎬 議員 사실 뭐 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해서 믿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자 감세'라는 말 좀 쓰지 말자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부자 감세 제대로 했습니까, 만약에 그 원리대로 하자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柳一鎬 議員 말하자면 제대로 못 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67%에서 70% 가까이 사실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자꾸 그렇게 연결시키는데요 그거 인하하면 중소기업도 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세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감세정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하는 그 최고세율 인상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재정건전성, 재정 적자의 문제는 양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적거나 세출이 너무 많거나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유럽발 재정 위기를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리로 가는 것 아니냐, 걱정은 좋습니다. 당연히 뭐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하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나……

제가 이거 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4개국 내지 5개국의 조세부담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30% 넘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북구라파……

○柳一鎬 議員 북구라파 말고요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발 재정 위기를 겪는 그리스, 스페인……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남유럽 쪽 얘기지요?

○柳一鎬 議員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조세부담률 말씀 하셨습니까?

○柳一鎬 議員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지금 수치를 갖

고 있지 않은데요.

○柳一鎬 議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를 겪는 원인은 다 잘 알려진 대로 방만한 정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지출의 엄청난 확대 때문입니다.

미국이 과거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른바 재정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다 결국은 가장 큰 부분은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정말 지출을 지출답게 쓸 데 쓰고 불요불급한 것 줄이고,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감세가 곧 재정 위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재정 수입과 지출 간에,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전번 메르켈이 등장하기 전에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 중에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80% 이상 받았습시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나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20%를 자기 일반 정상적인 급여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오르지 않은 것이지요.

이번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금을 자기들 받는 급여의 90% 이상까지 주고 그랬습시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부담률 수준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감당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출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柳一鎬 議員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교과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게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 논쟁이 여야 간에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전국적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무상급식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면 실시할 때 재정추계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제 기억으로 현

재 저소득계층에 대한 무상급식하고 농산어촌 해서 현재 무상급식으로 주고 있는 재정이 아마 36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동시에 다 하게 되면 아마도 한 2조 가까이는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柳一鎬 議員 연간, 그러면 글썽 이것을 결국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반씩 나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 부분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재원을 재배분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충당하거나 해서 재원이 충당되어야 하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정말 참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살아나는 경제가 온 국민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을 유념하셔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柳一鎬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2일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선거를 통해 나타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흐름과 우리 경제의 상황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집행의 현장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은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유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출신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가고 있는데 긴장완화를 위한 뽀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 많은 국민들이 국가안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 정치권은 6·2 지방선거의 표심과 민심을 사이에 두고 차기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은 속이 터지고 국민은 답답합니다.

총리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어릴 때 흥부놀부전 많이 읽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배영식 의원 최근에 놀부 심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놀부 심보라 하는 게 어떤 심보입니까? 아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놀부 심보요?

○배영식 의원 예, ‘흥부, 놀부’ 할 때 놀부 심보.

○국무총리 정운찬 남 잘 되면 싫은 거지요.

○배영식 의원 흥부가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걸 놀부 심보라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 시중에는 ‘야당 심보’라는 게 있는데 혹시 한번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웃으면서)

야당 잘 되는 것 못 보는 모양이지요.

○배영식 의원 예, 야당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물론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도 그런 경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총리께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마도 적어도 통계적으로 잘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야당들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4월의 실물경기 지표와 5월의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좀 많이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용이 5월 달에 5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1/4분기에 8.1%가 되지 않았습니까?

○**배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9.9% 증가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지난 1월 78.9% 대비 4월에는 82.2% 올라가고, 수출도 31.5% 늘고 소비도 7.1% 상승하고, 설비투자도 25.7% 증가하는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기저효과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장의 질과 고용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작년만 해도 고용이 늘다는 게 희망근로사업 같은 걸로 늘었다면 금년에는 민간 부문의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금년에 고용이 늘 것이 훨씬 더 지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부 마중물 효과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작년 4/4분기 5.2%, 금년 1/4분기는 7.3%로 민간의 기여도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장기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고용의 질도 제조업 부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 부분도 많이 늘고, 또 민간 부문, 공공부문 제외한 취업자 수가 2002년 7월 이후 최대로 늘었습니다. 51만 7000명입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배영식 의원** 그래서 이명박 정부 최근에 금융위기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적을 좋게 내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전 모 야당 대표께서 대표연설 하시면서 정부의 발표가 허황된 통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우리 정부가 이런 통계를 낼 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믿어 주십시오. 정부의 통계는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샘플에 근거해서 정말로 과학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조사·발표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비롯해서 국가가 작성한 통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발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잘못된 것은 결국은 전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영식 의원**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를 통계청 직원들이 들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배영식 의원** 이 같은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두고 최근에 세계은행이 많은, 또 IMF가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을 스테이블(stable), 안정적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 석학자도 “아직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만이 경제 위기의 여파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 세계가 한국 경제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유독 야당만이 우리 경제 성적을 못 믿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오도하는 이런 처사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말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허황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지만 대외적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민계정,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등 각종 통계는 국제기준에 맞게 산출되고 국제사회와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 방법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로부터 죽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 숫자로 어떤

경제지표가 좋아진 것이 있다면 좋아진 겁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렇지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오도하는 그런 처사라고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단지 이러한 통계들은 거시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이 골고루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미시적 측면에서 아마 야당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허황된 통계’라고 하는 말씀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추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리가 지금 지난 5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과학기술 같은, 그것도 뭐 소프트나 하드나 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드파워인데 그 하드파워는 상당히 선진화됐는데 사회적 신뢰라든지 규범의식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파워 측면에서의 성장은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 따라서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본 의원이 볼 때도 사회적자본의 확충이 제일 기본 요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이 사회적자본의 정의는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어떤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자본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영식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물질적 자본은 다 아는 거고,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많아야 되고 또 질도 높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을 걱정하는 것은 양적으로 봐서 인적 자본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생성하고 축적하자고 하는 것은 질적 인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진국가 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자본은 한마디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일체의 사회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바로 사회적자본의 핵심이며 신뢰 수준이 높은 고신뢰 사회가 저신뢰 사회에 비해 더 높은 경제적 성공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무형자본이고, 또 이 무형자본의 대표적인 게 사회적자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한 예를 들자면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19세기 초반에 불란서의 유명한 정치철학자가 “미국 가서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소셜 네트워크다. 불란서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로버트 풋남이라고 하는 학자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자본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바는, 무형 자산에 들어가는 이 사회적자본 확충이 안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분열 속에서…… 그 물질적 토대는 형성된다 할지라도 인적, 더 나아가서 사회적 토대가 형성이 안 돼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가 건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역 간, 노사 간, 계층 간, 수도권과 지방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일례로 과거에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보면 그로 인한 직접 피해가 1조 574억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사회 불안을 가중해서 나오는 간접 피해가 2조 6900억이나 된다는 이런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이게 OECD 국가 전체에서 볼 때 엄청나게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서 40위권으로 밑에 들어 있고, 또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스위스 IMD가 발표한 결과입니다마는 전체 57개국 중에서 23위, 그 23위를 한 주된 내용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됐습니다마는 기업 관련 법규가 48위,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가 51위, 노동 관계가 56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선진국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민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역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말해서 특단의 방안은 찾기 힘들지 모르나, 모른단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나, 제가 생각하는 역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신뢰 수준을 좀 높이려면, 국민 간의 신뢰가 더 두텁게 형성되려면 누군가 작은 일이라도 한번 약속을 하고서는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약속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회의 신뢰가 두터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총리께서도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세종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그야말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것은 개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국가 수준에서 그렇지만 잘못된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건 컨센서스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예를 드시더라도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선거 때만 되면 악성 포퓰리즘이 창궐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 죄송합니다.

○배영식 의원 아직 들어가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배영식 의원 선거 때만 되면 악성 포퓰리즘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배영식 의원 예를 들면 무상급식, 의료 무한 서비스, 무상아파트 공급, 예산은 더 풀고 세금은 덜 걷겠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배영식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한번 도모했으면 제대로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급식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부터 시작을 해 갖고 급식이 바람직하다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겠으나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재정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다 무상급식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쓸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벌 총수의 아들이나 손자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배영식 의원 예, 그래서 과거 남미의 예나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배영식 의원 총리께서는 앞으로 사회적자본 확충과 악성 포퓰리즘 근절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아 주시길 말씀을 올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들어가시고,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취임 초기에는 지방 많이 다녀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배영식 의원 요새는 G20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또 좀 가 보려고 그러합니다.

○배영식 의원 정부에서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경제가 지금 빈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표상의 화려한 통계 뒤에 어둡고 그늘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거 인정하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전번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하고 논의에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소위 경제적 취약자인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 영세 중소기업 이런 경제취약계층이 호황일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보고 경기가 불황으로 빠져들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를 제일 늦게 느끼는 계층은 역시 이런 계층입니다.

○배영식 의원 재래시장이, 지방이 어려워진 거 아니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2008년, 2009년, 2010년 시설현대화자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좀 많이 증액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서 재정에서도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오전에 나오신, 이 SSM 관계를 국회에도 법안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소위 지속가능한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의 육성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간단없이 재정 형편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점포 수가 21만 개, 종사자가 36만 명,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30% 이상, 중소기업 공산품의 60% 이상을 거기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자금이 2008년 1967억, 2009년에 1740억, 2010년에는 1568억 이렇게 줄었습니다.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방 소재 기업이 어렵다는 거 다 아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배영식 의원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인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으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배영식 의원 지금 강원도, 충북, 충남까지는 많이 내려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을 수도권 기업과 좀 차등 적용하고 상속세 감면 등 이런 부분도 수도권과 차별화된 기업 승계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배 의원님 말씀이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북도, 강원도 정도 순에서 멈추고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지방 기업은 별도로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배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당위론이라 할까요? 그 지원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재정세계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또 차등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올 수 있는 역기능이나 또 이런 것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 고민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 같은 경우를 차등화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에 본사가 있는 기업법인하고 충청남북도나 강원도에 있는 데 하고 수도권에 있는 데하고 법인세를 만약에 각각 달리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당장에 가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국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 좁으니까?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하는 이런 것은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을을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위 집행 가능성 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식의 세율 시스템을 차등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아마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방 기업이 살아야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지방 기업 다 문 닫아 버리면 그 법인세 적용할 기업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리고 지방 주택 경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까 수도권 출신 의원님은 다른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과 차별화되게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인하라든지 또 대한주택보증보험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매수를 하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계되는 금융상품에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의 미분양이 16만 채에서 한 11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편적인 재고인 한 7·8만 채보다는 아직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에 걸쳐 취하고 있는 조치가 지금 이제 막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배영식 의원** 예.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반기에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 인상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기·수도·가스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특히 해외에서 원료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가격에 반영해 줘야 할 필요성이 크고요. 또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가는 우리 서민생활에 주는, 또 생활물가의 상승에 직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취급하는 공기업이 사업상 독점의 이윤을 누린다든지 과점의 혜택을 누릴 부분이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좀더 착실히 하고 해서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서 그러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내부적으로 좀 그것을 안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입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까지는 반영을 안 해 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물가에 주는 영향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래저래 대한민국 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많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가 지혜를 발휘하면서 성장도 하고 물가도 안정시켜 나가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 통상 전기·가스가 공공요금 인상의 선두주자입니다. 여기 선두주자를 잘 붙들어야 그다음 중구난방으로 오르는 공공요금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웃으면서)

여기 지금 우리 최경환 장관님께서 저를 뒤에서 쨌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안 올려 줄 거냐고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배영식 의원** 예,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융위기, 경제위기 때 출구전략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제 금리인상 빼고는 다 지금 거의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거시경제 상황, 유동성 볼 때 앞으로 장관께서는 어떤 변수들을 가장 많이 고려해서 금리인상 시점을 잡을 계획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책금리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고려해야 할 최대의 변수는 경기 회복 추이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인플레이 압력이 있느냐, 물가 상승의 조짐이 있느냐,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금융시장이나 이런 외환시장·자본시장은 안정이 돼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 금통위가 종합

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외형적 거시경제 상황만 고려하지 말고 서민생활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가 700조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희도 바로 그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갔을 경우에 가계가 안아야 할 추가적인 부담이,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게 되고 또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제일 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변수를 잘 감안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외화유동성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배영식 의원**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에 올 수 있는 충격, 완화장치는 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자본유출입 그 말씀이시지요, 변동?

○**배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금 흐름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계적인, 전체적인 부를 창출하고 경제 규모를 키워 가는데요. 이것이 지금 잘못되면서 예를 들면 소위 ‘이머징 이코노미(emerging economy)’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신흥국은 세계적인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이 소위 인플로우(inflow)가, 굉장히 유입이 일어나고요.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하루아침에 또 자금 유출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을 흔들게 되고 자본시장을 붕괴시키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두 차례나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한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제 운용의 기본인 개방과 경쟁의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유출입 완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선물환 거래에 대해서 포지션 규제를 하는 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게 시장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서 일정한 기간 유예제도라든지 또 현재 한도를 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2년 동안 인정을 해 준다는지 이런 충격 완화장치를 포함해서 이번에 선물환 포지션 규제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수용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우리나라가 외환 자유화를 너무 일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것은 견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마는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NDF 거래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배영식 의원** 그런 부분과 다 연결해서 이 부분이 아마 고려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배영식 의원** 예, 들어가시고……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때문에 여러 질의를 많이 받으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어떻습니까? 현재 2단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배영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그 용역의 기술 부분을 맡은 회사가 과거 부산시가 발주해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부산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의 기술 부분을 맡은 회사하고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 공정성 논란 여부에 좀 휩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글썄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보니까 일단 국토연구원에서 규정에 따라서 경쟁 입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의 기술 관련 전문회사들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불공정이 됐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예. 그런데 지난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미루기보다는……

○**배영식 의원**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입지가 2개 후보지가 제시가 됐는데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는 이게 잘못 공개하고 그러면 오해나 불필요한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신공항은 입지 선정에서 완공까지 대략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배영식 의원** 10년 이상이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배영식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입지 조기 결정하고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뭐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간에 상당히 견해가 다르고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정말 나중에 결정이 됐을 때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면에서 제대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늦추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정밀하게 해 가지고 입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 결정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

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입지평가위원회 구성을 6월 말에 끝내고요, 평가단도 구성하고 그렇게 됐을 때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또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하는 데 시간은 조금 소요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절차로 봤을 때 저희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의원님께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신공항 입지를 밀양으로 하자 해서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이렇게 지금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는데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밀양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지금 이 후보지가 2개 나온 상태하에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고요. 다만 이거를 결정할 때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소위 다른 배제 없이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는 이게 어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용해야 될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차원에서 엄밀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어떤 경우든지 객관성과 공정성이 또 투명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배영식 의원**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6·2 선거 민의를 반영한다 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 또 일부 국민들이 중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했을 때 사회경제적 혼란, 마비가 오겠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중앙정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 내용을 지자체와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우리가 이

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무려 98조라는 사업 내용을 이 4대강 사업에 담아 달라는 게 지자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엄선하고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 결정을 했고요. 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추가로 반영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이 4대강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다 지역 발전과 지역 업체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롭 당선되신 지자체장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막상 부임하셔서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받으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절대 이 사업이 정치적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대단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결정을 내리시라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 사업이 절대 중앙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바로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배영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읍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갈등을 풀어 나가고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평화와 풍요를 안겨 드리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와대 박재완 수석의 말을 빌려서 4대강 재검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나

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미안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숙 의원** 청와대 박재완 수석의 발언으로 4대강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4대강 재검토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일부 지역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좀 종합해 와 주십사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청와대하고 무슨 뜻인지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공식적으로 건의해 오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었고요.

오늘 총리께서도 답변 중에 ‘국민이 반대한다면’, 좀 유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뜻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하겠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도저히 못 한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의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에 정치 분야 질문에서 답변하실 때는 4대강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면 지도·계도권을 발동하겠다고 총리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과는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지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정위원회라고 그럴까 조정하는 모임, 조정협의체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이고 정안 된다면 뭐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숙 의원** 지도·계도권을 여전히 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구체적인 모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겠는 못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좀 정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숙 의원** 조정에 관해서 협의를 시작하면서 ‘안 하면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고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예, 그러세요.

제가 청와대 말씀이나 오늘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줄기 좀 변화의 조짐을 일단 봅니다. 이전에 예산 질의 때도 그렇고 청와대 수석계도 ‘대통령께 이 문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동안에 일체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말씀이나 박재완 수석의 말씀이 일단 좀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 보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예산을 따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갑과 을의 관계인데 설마 예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반대하겠느냐.’ 이런 판단이 깔려서 그런 면에서 절대로 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예산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단을 갖고 하시는 거라면 예단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종의 좀 겁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의원님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예를 들자면 ‘국론 분열이 두려우니 세종시 표결을 좀 빨리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론 분열이 없이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떤 지역에서 정 못하겠다 그러면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같이 의논해 봅시다. 같이 검토해 봅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연관됩니다. 아까 앞에 국토부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8조 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는

데 22조 원밖에 반영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 사업 예산이었는데 그런 것은 빼놓고 준설 사업과 보 사업 예산만 반영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의 예산을 수질 오염원 관리 쪽에 주로 쓰자,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조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4대강 예산은 기존의 것들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예산 덩어리 자체를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이지 수질 개선만 한다든지 또는 가뭄이나 홍수로부터의 피해 방지,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는 동안에 잠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앞으로 4대강 예산에 관한 조정·협의 등이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을 갖고 자치단체장들을 겁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장관님, 매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박선숙 의원** 법적 근거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에는 아마, 제가 훈령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라고 한 것을 저번에 아마 2008년 하반기에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전부터 쪽 이어져 오던 회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대통령령을 개정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개정 안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확인했는데 안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의결 사항이, 이게 법적 회의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박선숙 의원 올해 1월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게 여쭙 보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요. 작년까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해서,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 대통령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금년 들어서면서 고용 문제가 경기 회복 중에서도 제일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니까 고용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그래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고용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논의를 하자, 이래서 제목을 국가고용전략회의로 그렇게 중간에 아마 삽입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아마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늦었지만 고용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어떠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는지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서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2009년 12월 12일 예결위에서 장관님께 국가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해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박선숙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상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고용정책 기본법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선숙 의원 예, 거기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게 아마, 저희가 알아보니 2008년 말에 경제 위기에 따른 비상 국면에 처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아마 평상시를 상정한 것으로 보고 이 비상 국면에 적절치 않다고 봐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 KDI 등 연구기관이 참여를 해서 국가고용전략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 노동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러한 국가고용전략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의원 유감을 표명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지난해 12월 12일에 2008년에 만료된 그 기본계획을 2년째 방치하셨으니까 조속히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겠단 말씀드렸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의한 이러한 것은 저걸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마는 정부는 지금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사실이 고용 창출에 두고 모든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지적하신 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이 부분은 이행이 안 된 것이 유감스러운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자가 없도록 빨리 즉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박선숙 의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2009년 중반입니다. 다마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목표가 어떻게 되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록 자료가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으면서 제대로 제출이 되질 않았었어요. 제가 그 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해 가지고 실제로 국민들 어떤 계층에게 도움이 갔는가를 점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책상에서의 서류로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침반 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좋은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하셨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5월 20일 천안함 발표 그리고 5월 24일 대통령 담화 그다음날 3개 부처…… 그다음 3개 부처 장관의 기자회견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일정과 내용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소위 경제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따르는 금융시장 내지는 실물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번 사건은 무려 46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꼭 이것만은 아니겠습니까라는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내외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믿었던 탓인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연기금과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넣어 가지고 이제 받치고, 그런 위기관리를 하셨지요? 그런데 혹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르는 시나리오 같은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의원** 하셨냐고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상당 기간 계속될 경우를 상정한 예측을 하고 또 대응 시나리오를 짜셨냐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로만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랬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펀드멘탈이나 잠재력, 위기대응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에 관해서 또…… 그것 예측하고 그것에 관해서 긴장을 장기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건의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예측에 따른 건의를 하셨는지를 여쭙어 봤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말입니다. 이 긴장이 선거 때를 넘기면서 진정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전쟁기념관에서의 대통령 담화와 3개 부처 장관의 기자회견 등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국가 신용 부도, CDS프리미엄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20일과 24일 이틀에 걸쳐서.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6월 2일 선거 이후 일정하게 진정될 거라는 나름대로의 예단이 정부 내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이 정부가,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일정하게 긴장과 위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쟁은 없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는 걸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긴장은 더 고조될 수도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뼈라 보내는 것, 확성기 문제, 이것 지금 한발 물러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쏘면 저쪽에서 응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의 상황은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계시는지 이것이 일시적 상황인지 앞으로 상존하는 상황인지 검토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관해서, 관련된 재정건전성 회복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가부채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낮아졌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 우리가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것 너무 잘 아시지요?

G20 회의의 중요 어젠다를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설정하고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게 G20 개최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물론입니다.

○박선숙 의원 이런 의제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미 지난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어젠다로 이미 제기가 됐고요. 또 코리아 이니시어티브(Korea initiative)의 하나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OECD뿐만 아니라 G20 내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관심 또 이런 질문,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6월 하순에 열리는 캐나다에서의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질문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 이전에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건전성 회복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어 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물론입니다. 정부는 이번 10월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국가재정 안정화 계획을 같이 제출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출했고요. 이번에는 다시 1년 후에 2010년 내지 1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언제 우리가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제출할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이제 일단 받아 놓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재정 불균형과 건전성 회복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 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선숙 의원 OECD가 금리 정상화, 공공부채 관리, 공기업 부채 축소 등을 권고했는데 이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OECD가……

○박선숙 의원 강제력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OECD가 권고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나오는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레커멘데이션(recommendation)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은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금통위에서 자료가 돌아가기 때문에 검토를 할 테고요.

공공부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공기업 부채 축소 등에 더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OECD의 권고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쭙 보는데요. 4대강 사업 중에 수자원공사의 차입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공기업 부채 축소 문제, 공공부채 관리 문제 차원에서 이에 관한 과감한 시정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출자를 한다든지 해서 채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의원 시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공기업 부채 축소, OECD 권고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 대안을 저희한테,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윤증현 장관께 질문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12일 제가 국토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올해 11만 개 창출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성 있는 판

단이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재검토해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그렇습니다.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숫자를 만들 때는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투자액에다가 한국은행의 산업연간표 해서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를 곱해서 4대강 사업 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1년에 말하자면 1인으로 봤을 때 몇 개가 창출되느냐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계산해서 저희가 34만 개를 제출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4대강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연관까지 감안해서, 이걸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투자의 순수한 투자액을 곱해서 만든 숫자라는 걸 의원님께서 아신다면, 이게 저희가 임의로 이런 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선숙 의원** 장관님, 제가 12월 12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한국은행의 고용유발계수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박선숙 의원** 그래서 그 이상의 다른 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도 바로 그거라고 저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선숙 의원** 그래서 11만 개 목표 올해 달성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저희가 현재로 달성된다,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현재는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매일 일하고 있는 인원이 한 1만 명이 넘고요. 앞으로 하반기 되면 그게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또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쭉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저희가 집계를 쭉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로 발 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쭉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용이 창출됐는지는 별도로 집계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해 주시고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박선숙 의원**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11만 개가 과다하다고 미리 정정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산집행률이 전체로 봤을 때—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한 25%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얼핏 계산해 봐도 일자리가 2만 5000에서 3만 개는 만들어졌어야 되네요, 예산집행률 대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라는 게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산업에 미치는 과급 때문에 그걸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1년 단위로든지, 어쨌든 사업기간 중에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최대한 집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 숫자가 얼마나 실제로 가능한 숫자인가 하는 논의는 보고서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정부에서 안 해서 저희가 해 봤거든요. 1만 명 중에 약 2500명에서 3000명 사이입니다, 많이 잡아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와 대비를 해 보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노동부장관께 지난 예결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4대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노동부장관도 동의를 하셨어요. 최소한 4대보험은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희망근로를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희망근로를 한시적인 일자리로 만들었어도.

1만 명 가운데 채 3000명 정도만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나머지 7000명은 아르바이트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 차원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  
 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채 30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해 있는데 그중에 일용직이 한 2300명 이상 됩니  
 다, 2300~2500명.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500명  
 미만이 정규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요. 1만 명  
 가운데 500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거  
 나 아니면 일용직도 아니다. 1만 명이라고 자랑  
 하셨는데, 선거 앞두고 5월 14일 보도자료를 내  
 셧더라고요. 그런데 원청업체 273개, 하청업체  
 116개, 총 389개 업체를 저희 당에서 여러 의원  
 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제가 지금 의  
 원님께……

○박선숙 의원 정부가 할 일을 저희가 대신했으  
 니까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일자리 아닌 걸 갖고  
 일자리라고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런데 일자리가 아니  
 냐 기냐는 의원님이 보시는 기준과 저희가 볼 때  
 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선숙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청 일자  
 리, 통계청 기준 일자리로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소상하게 정  
 리·과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정부가 가끔 통계청에서 잡아 주  
 지도 않는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도 문제지만 일자리 예산 다른 데 썼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산을 4대강이 잡아먹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예산 부담이 커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써야 되는 교육·복지·일자리 예  
 산까지 잡아먹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을 숫자로써 입증한 겁니  
 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저희가 얘기  
 할 때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나 이런 것은 그  
 령게 무시할 숫자는 아닙니다. 의원님, 너무 정부  
 가 하는 일을 폄하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  
 든 이것은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서 의원님께 제  
 시를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의원님과 한번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장관님, 폄하라는 말씀은 취소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박선숙 의원 폄하라는 말씀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12월 10일 날 질의한 속기록 찾아보시고  
 요. 한국은행의 건설업에서의 고용유발계수에 대  
 해서 제가 장관님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성격에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건축업과 토목업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건축업에서의 고용유발효과와 토  
 목업에서의 고용유발효과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실제와 목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거예  
 요.

폼하라는 말씀은 취소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도 잘 알고 있습니  
 다.

○박선숙 의원 폄하라는 말씀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어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글썄요, 저는 나름대  
 로 너무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만 가  
 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고 그랬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수입이 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라도 일할 수만 있다면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정규직만 하는 것이 꼭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면 취소할 용의가 있  
 습니다.

○박선숙 의원 적절하지 않아서 취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 없이 드  
 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박선숙 의원 지난해 6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도실용 친서민을 표방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달 만에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국민들이 중도실용 친서민에 대해 기대했기 때문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중  
 도실용 친서민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  
 금 선거의 결과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도실용 친서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  
 다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가 할 일 야당이 대신하겠  
 습니다. 조사 안 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경청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친서민

정책 제대로 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박선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님, 규율 잘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오 의원님, 오늘 3시에 출판기념회에 저희들 오늘 회의 때문에 못 가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의원님께서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민노당의 홍희덕 의원님이 한 번도 꿈쩍 안 하고 아침 10시부터 쭉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60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용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제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진병헌	진여욱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진하

○개회 시 재석 의원(101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고흥길 구상찬 권영길 김무성  
 김상희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영선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용 김희철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송광호 신상진  
 신영수 심대평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윤영  
 윤상일 이경재 이성남 이재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진삼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전여옥  
 전현희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최재성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속개 시 재석 의원(61인)

강기갑 강명순 강승규 고흥길  
 김광림 김금래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김학용 김혜성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영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신건  
 신성범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윤상일 이범래 이성현  
 이애주 이종걸 이진복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정의화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원진 진영 최경환 최병국  
 최연희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희덕

○산회 시 재석 의원(66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김무성 김상희  
 김성곤 김성조 김성태 김소남  
 김영록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아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건 안경률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이낙연  
 이미경 이범래 이성남 이용희  
 이윤석 이춘석 이춘식 이한성  
 전현희 정의화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최경환 최규성  
 최문순 최연희 허태열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출장 의원(4인)

강기정 이윤성 정갑윤 한선교

○청가 의원(4인)

유원일 이상득 이상민 차명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권오을  
 입법차장 안병욱  
 사무차장 임인규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출석 정부위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손범규	한나라당	2010. 6. 15
	장세환	민주당	

○의안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박대해 · 신학용 · 이한성 · 이학재 ·



김충환 · 이인기 · 임동규 · 권선택 · 이두아 ·  
신상진 · 박준선 · 유재중 의원 발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0. 6. 15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기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0. 6. 15 권성동 · 이명규 · 이종혁 · 박준선 ·  
최연희 · 김을동 · 이학재 · 박순자 · 배은희 ·  
이군현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임동규 · 이종혁 · 이한성 · 김성태 ·  
이해봉 · 정해걸 · 이정선 · 박대해 · 강성천 ·  
이두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김유정 · 김재윤 · 김소남 · 임영호 ·  
노영민 · 김춘진 · 박영선 · 최영희 · 조승수 ·  
최규식 · 강기정 · 조영택 · 유원일 · 김충환 ·  
김동철 · 김영진 의원 발의)

6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김유정 · 홍재형 · 김재윤 · 노영민 ·  
김춘진 · 박영선 · 최영희 · 최규식 · 강기정 ·  
조영택 · 김동철 · 김영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이명수 · 김우남 · 정희수 · 김을동 ·  
임영호 · 심대평 · 김용구 · 권선택 · 정의화 ·  
김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이명수 · 이인기 · 이재선 · 이성현 ·  
정희수 · 김을동 · 임영호 · 심대평 · 윤상일 ·  
김용구 의원 발의)

6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금양98호 선원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재개와 의사자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10. 6. 15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24  
이원상 외 7인으로부터 최문순 의원의 소개  
로 제출)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정치에 관한 질문서(4건)**

(이상 4건 2010. 6. 15 유성엽 의원 제출)